

광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A study for the Vitalization of the Art and Culture Education in Gwangju

Ⅰ 김 광 욱 Ⅰ

geri

CONTENTS



요 약	i
Ⅰ.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방법	8
Ⅱ. 문화예술교육 정책현황 분석	9
1. 문화예술교육의 정의와 종류	11
2.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흐름	16
3. 문화예술교육의 성과와 한계	19
4. 문화예술교육의 쟁점	22
Ⅲ. 2018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분석	25
1. 2018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27
2. ‘2018종합계획’과 지역과의 관계	33
Ⅳ. 타시도 문화예술교육 사례 분석	37
1. 사례 분석 대상 선정	39
2. 부산시: 부산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문화예술교육	40
3. 경상남도: 문화예술교육의 영역 확산	43
4. 성남시: 기능형 교육에서 탈피, 성남형 모델 개발	47

CONTENTS



V. 광주시 문화예술교육 현황	51
1.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현황	53
2. 문화예술교육 수요 현황	57
3. 문화예술교육 단체 현황	61
4. 광주시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현황	68
5. 광주시 문화예술교육 현황 분석 시사점	75
VI. 광주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향	81
1. 광주시 문화예술교육 기본 철학 수립	83
2. 광주시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계획 수립	86
3. 광주시 문화예술교육 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	88
4. 지역예술교육센터의 체계화 및 활성화	91
5.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94
VII. 결론	95
참고문헌	99

CONTENTS



〈표 차례〉

〈표 2-1〉 2011~201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요 정책 사업별 예산	14
〈표 3-1〉 지역기반 생태계 구축 전략의 추진과제	30
〈표 3-2〉 수요자 중심 교육다각화 전략의 추진과제	31
〈표 3-3〉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 전략의 추진과제	32
〈표 5-1〉 광주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 내 학습 공간 보유 현황	53
〈표 5-2〉 광주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 및 학습 공간 입지 현황	54
〈표 5-3〉 광주 문화예술교육 수강 기관 현황	55
〈표 5-4〉 광주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 성격분류 현황	56
〈표 5-5〉 광주 문화예술교육 강습 현황	57
〈표 5-6〉 문화예술교육에서 보완 사항	58
〈표 5-7〉 광주 문화예술교육 운영계획상 참여계획 인원 현황	59
〈표 5-8〉 문화예술교육 수강 시 어려움	60
〈표 5-9〉 광주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 현황	61
〈표 5-10〉 광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62
〈표 5-11〉 광주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 교육활동 권역 현황	63
〈표 5-12〉 광주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수행횟수 현황	64
〈표 5-13〉 광주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 설립년도 현황	65
〈표 5-14〉 광주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 종사자 수 현황	66
〈표 5-15〉 광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인력 구성 현황	67
〈표 5-16〉 문화기반시설별 문화예술교육 담당 평균 직원 수	68
〈표 5-17〉 문화기반시설별 문화예술교육 담당 평균 전업 직원 수	69
〈표 5-18〉 문화기반시설의 예산	70
〈표 5-19〉 문화기반시설의 상설문화강좌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71
〈표 5-20〉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실행 시 어려운 점	72
〈표 5-21〉 운영단체 프로그램 수혜대상	73
〈표 5-22〉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행 시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싶은 기관	74

CONTENTS



〈그림 차례〉

〈표 3-1〉 2018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28
〈표 5-1〉 광주시 운영단체(좌) 및 학습공간(우) 입지 현황	54

요 약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 계획을 광역 단위에서 수립하기에 앞서 광주 문화예술 교육의 현황을 폭넓게 분석하고 향후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음.

□ 문화예술교육의 정의

- 본 연구에서 말하는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에 의거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으로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말함.

□ 문화예술교육의 성장과 한계

- 2000년부터 시작된 국악강사풀제부터 지금까지 문화예술교육은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음. 2005년 208억원에 불과하던 예산이 2016년에 1,760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연간 300만명이 참여하고 8천여 명의 일자리를 배출하였음.
- 하지만, 수강생이 원하는 교육, 만족도가 높은 교육 등 질적 성장에 대한 의문은 여전함. 아울러 중앙에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펼쳐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는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되었음.
- 2018년에 발표한 중앙정부의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① 지역기반 생태계 구축 ② 수요자 중심 교육 다각화 ③ 문화예술 교육 기반 고도화라는 전략을 세우고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음.

□ 타 시도 사례 분석

- 부산의 경우 어린이 무형문화재 교실이나 세계문화유산 시민아카데미 등을 통해 부산시 문화정책에 기여하려고 노력하였음.
- 경상남도의 경우 경남의 인구구조와 상황에 적절한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학교인 ‘쓸만한교’를 운영하여 생애전환기를 맞은 중년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음.
- 성남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는데 기능형 교육에서 탈피하여 성남형 모델을 개발하려 했던 점이 돋보였음. 다만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문화예술교육과 유기적인 협업 등은 아쉬웠음.

□ 광주시 문화예술교육 현황

- 광주시 문화예술교육 인프라를 살펴보면 교육단체의 자체 학습 공간 보유 비율이 매우 낮았음.(광역시 평균 9.9%, 광주시 8.2%)
- 교육단체와 시설은 동구와 북구에 절반 가까이 집중되어 있음.
(단체는 동구와 북구에 47.6%, 공간은 동구와 북구에 29.7%)
- 문화예술교육 수강기관으로는 공공기관 부설기관이 40.2%로 가장 높았고, 교육방송이나 인터넷 사이트도 13.5%로 비율이 높았음.
-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을 살펴보면 영화가 11.7%로 가장 높았고 문화유산 탐방 및 인문학 강좌가 10.7%로 다음을 차지하였음.
- 문화예술교육에서 보완 사항으로는 ‘내용이 알차야 한다’가 25.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체험과 실기 위주가 되어야 한다’ (19.4%) 등으로 질적 성장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
- 문화예술교육 단체는 특광역시 중 많은 수준에 속하나 프로그램수는 특광역시 중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속해 단체별 콘텐츠가 풍부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단체 중 교육 프로그램을 첫 해 수행하는 단체가 5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수요자 입장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받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문화기반시설별 문화예술교육 담당 평균 직원 수를 보면 3.0명으로 전체 3.2명에 비해 낮음.
- 일련의 현황으로 볼 때, 광주시는 문화예술교육 시설의 균형 배분이 필요하며 기획 및 행정인력 양성 및 공공기관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또한 교육주체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과 국비 지원을 위한 지역 선도형 사업 개발이 필요함.

□ 광주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향

- 문화예술교육을 질적으로 제고하고 활성화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광주시의 기본 철학 수립이 필요함. 문화예술교육 역시 시민 기본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하며 이는 광주시의 지향점인 인권도시와 맞닿아 있음. 지역 스스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과 시민의 일상 생활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광역문화예술교육센터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해야 함.
- 다음으로 광주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이 필요함. 법에 의하여 광역 자치단체도 의무적으로 지역 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나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 이를 위해 교육대상과 내용을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문화예술교육의 확산을 주도하여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셋째, 광주시 문화예술교육 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에 힘써야 함. 이를 위해 핵심 기관인 광역센터를 거점으로 교육청과 평생교육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하며, 자치구와 교육지원청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마지막으로 광주시 문화시설과 연계를 강화해야 함.

- 넷째, 지역예술교육센터의 체계화 및 활성화가 필요함. 그동안 문화예술교육 체계는 중앙정부에서 지역으로 내려오는 수직적 체계였음. 이를 지역기반형으로 바꾸기 위해 광역센터 중심의 방사형 조직화가 필요함. 즉, 광역센터와 기초센터, 그리고 생활권 센터로 위계를 설정하고 이를 수직적 계역화가 아닌 수평적 네트워크인 방사형 조직으로 체계화해야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음. 이를 위해 광역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공급 중심에서 허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기초센터와 생활권역 센터는 기초 자치구와 마을 단위를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여야 함.
-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펼쳐야 함. 문화예술교육이 10년 넘게 추진되어 왔지만 아직도 시민의 문화예술교육 인지도는 낮은 상태임. 이를 위해 지역방송과 연계하고 마을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문화예술교육이 시민의 권리임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이와 별도로 학교 현장에서 홍보를 강화해야 함. 학교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에서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을 받고 성장한 시민이 문화예술 소비를 더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 차원에서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

I

서론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지역 문화예술교육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광주 문화예술교육의 현황을 폭넓게 분석하고 향후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본격적인 계획 수립에 앞서 기초적인 성격의 연구임. 세부적인 추진과제는 물론이고 비전과 전략 등은 연구 범위에서 벗어남.
 - 지역 문화예술교육 수립이 갖는 의의와 배경 등은 다음과 같음.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및 시행령에 따라 광주시는 문체부의 <문화예술종합계획>을 반영한 지역계획 수립 의무가 있음.
 - 2015년 개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6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동법 동조 4항에 따르면 광역시장과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지역문화예술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함.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6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2. 교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
 3.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4.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5.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지원·평가
 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
 7. 문화예술교육 연구의 지원
 8.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

9. 문화예술교육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10.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를 준용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제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지역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별 계획그이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예술교육을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지가 보임.
- 광역자치단체에도 지역별계획을 수립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지역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의지를 담았음. 다만, 종합계획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공급자(중앙정부)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으나, 지금까지 실무진행에서는 종합계획을 반드시 반영한다기 보다는 종합계획의 문제의식과 대응방향을 반영하여 지역별 특화 계획을 수립하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실무 사항과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 2016년 3월에 시행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르면 문체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해야 함.
- 2018년 초에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은 시·도에 전달되었으며, 시행령 역시 7월 경에 배포되었음.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종합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2. 해당 연도의 주요사업별 추진 방침
 3. 해당 연도의 주요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4. 그 밖에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하생략)

- 동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통보 받은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아울러 지역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도 명시하였음.
 -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지역별 계획을 알차게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자칫 지역의 자율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함. 이미 종합계획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한 번 정한 셈이 되기 때문에 그 외에 또 다른 조항 자체가 제한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2조의3(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제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통보 받은 해의 12월 31일까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지역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지역별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내 교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에서의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생략>

□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수요 증가

- 문화예술교육은 단순히 문화예술의 기능적 향상을 위해 받는 교육이 아니라 예술적 감각과 창의적 사고를 늘리고자 받는 교육으로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제고와 연결이 됨.
- 일반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제 교육 참여를 통해 사회문화적 가치와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욕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은 소득수준이 증가하고 여가활동이 많아질수록 함께 증가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함.
- 또한 문화예술교육의 특성상 문화향유와 문화창작을 모두 아우른다는 점에서,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의 수준이 높을수록 문화향유의 질적 수준도 함께 높아진다는 점에서 정책적 고려요소가 많음. 결국 문화예술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투자와 배려가 많아져야 함.

□ 지방분권과 문화자치 시대에 걸맞은 지역문화예술교육 계획 필요

- 문화예술교육정책은 지금까지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음.¹⁾
 - (예산) 2005년 208억원에서 2016년 1,760억원으로 약 8.4배 증가하였으며, 2016년도 문체부 전체 예산 대비 2.2%, 문화예술부문 예산 대비 5.5%에 달함.
 - (수혜자수) 2005년 71만명에서 2016년 300만명으로 4배 이상이 증가하였음. 특히 사회영역 수혜자는 11만명으로 648배 증가하였음.
 - (교육수혜기관) 2005년 3,220개였던 참여 학교 및 시설 수가 2016년에는 11,900개로 3.7배 증가하였음.
 - (예술강사) 2005년 1,628명에서 2016년 5,357명으로 3.3배나 증가하였음.
- 하지만 양적 성장에 대한 한계 또한 명확하였음.²⁾
 -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 개념 및 범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여 근본적인 논의와 공론화 필요
 - 정부 주도의 비약적인 양적 성장 및 지원대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중심

1) 문체부 문화예술교육 정책 현황(2016년 기준)

2) 아래 내용은 <2017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17~18쪽을 요약한 것임

의 중앙 주도적 사업 지원의 한계

- 현장의 요구와 수요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부족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관리 부족
- 지역 내 환경과 수요를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나 중앙-지역간 지원 및 협력체계 미비
- 무엇보다 예산과 사업집행력을 지니고 있는 문체부가 하향식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이 컸음. 특히 문화예술강사들의 고용 문제로 인한 일련의 사건과 추이를 살펴보면 여전히 문체부는 지역에 하달하고자 하는 경향이 컸음. 이는 결국 2016년에 몇몇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반납으로 이어짐.
-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또한 지방분권과 문화자치가 화두가 되고 있는 흐름에서 중앙정부와 지역 간의 역할을 새롭게 조율하고 지역 역시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

2. 연구방법

□ 문헌조사

-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연구기관의 보고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8),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및 정책방향 연구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7), 지역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연구
 - 김종휘(2017),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혁신과제(새정부 문화정책 방향 토론회)
 - 최보연(2017),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분석 및 개선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백선희(2017), 서울시민의 문화적 권리 보장 차원에서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4대 개선방안 수립, 서울연구원
 - 조현성(2016), 문화예술교육정책 중장기 추진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예술교육자원 실태조사 및 활용을 위한 분류체계 연구(2016)
 - 양혜원(2015), 사회문화예술교육 중장기 사업전략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서울문화재단(2015), 학교예술강사와 예술노동-문화예술교육의 질적인 성장을 위한 과제

□ 워크숍 및 설명회

- 2018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설명회 등

II

문화예술교육 정책현황 분석

II. 문화예술교육 정책현황 분석

1. 문화예술교육의 정의와 종류

가. 문화예술교육의 법적 정의

□ 문화예술교육의 법적 정의(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

-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으로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말함.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 ①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 가. 학교 문화예술교육: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
- 나. 사회 문화예술교육: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은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등과 같은 개별 장르를 말함. 따라서 문화에 대해 광의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 협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음.
- 문화산업과 문화유산까지 포함하여 문화예술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보다 광의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 대개 ‘문화예술’을 일컬을 때 예술로

축소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문화산업과 문화유산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임.

□ 문화예술교육의 정의에 따른 범위

-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교육이라 정의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몇 가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음.
- 조현성(2016)은 광의의 문화예술 개념에 따른 가치체계, 신념 등은 제외하므로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수행하는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문화영역의 교육 사업이지만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시민단체에서 수행하는 ‘시민교육’은 문화예술을 매개로 할 때는 문화예술교육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교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보았음.
- 물론, 학교 제도권에서 음악, 미술, 체육 등 교과영역에서 실시되는 교육은 여전히 학교 교육에 속하지만 만약 교과영역에서 학교 예술강사가 포함될 경우 이를 문화예술교육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가 있음.
- 반대로 청소년수련원, 사회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문화예술교육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의 범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음. 이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으나 정책적 관점에서 잠재적 문화예술교육으로 포함시켜 논의해야 함.

나. 문화예술교육의 하위 종류

□ 학교 문화예술교육: 초중등학교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

- 앞서 법적 정의에서 살핀 바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의 양대축에 해당하며 현행 초중등학교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을 의미함.
- 초기 문화예술교육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보듯 문화예술교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단위사업임.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2005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은 2008년부터, 예술꽃 새싹학교 지원사업과 예술강사의 발(發), 예술상상체험대 등은 2012년부터, 2014년부터는 고3 수험생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 각각 시작되었음.

- 학교 예술강사 사업의 흐름을 살펴보면 보편적인 교육 프로그램에서 대상에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세분화되는 추세가 있음.

□ 사회 문화예술교육: 초중등학교 이외 공간에서 이뤄지는 문화예술교육

- 학교 문화예술교육 이외의 문화예술교육은 사회 문화예술교육임. 물론 학교의 범위가 정규교과과정인지 대안학교까지 포함하는지 등의 논란 여지는 있지만 학교 이외의 지역은 모두 사회로 인식하고 있음.
- 문제는 학교보다 사회의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한데 지원 예산과 인력은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음. 이러한 이유는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범위가 다른 영역과 겹치는데 비롯되기도 함. 즉, 평생교육의 영역, 민간 문화 센터와의 영역이 중복되어 확장성에 제약이 있음.
- 2005년 군부대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과 교정시설, 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06년에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기관 예술강사 지원 사업으로 확장되었으며, 2007년에는 아동복지시설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거쳐 2010년에는 소외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오케스트라교육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음.
-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시작은 소외계층 돌봄사업의 성격이 짙어 문화예술교육 이라기 보다 문화복지 차원의 성격이 더 깊음. 이후에도 2013년에 시작한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지원사업과 2015년에 시작한 상이군경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등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확산과 교육의 본질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보편적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학교 문화예술교육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 2016년 기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예산은 1,304억 원인데 학교 문화예술교육이 61%, 사회 문화예술교육 예산은 21%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2013년부터 문화예술교육기반조성 및 기타 사업의 비율이 10%대로 올라섰으나 2016년 들어 다시 7%대로 떨어져 문화예술교육 기반조성 및 기타 사업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대부분의 사업이 강사 인건비로 지출되는 만큼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 및 지속 가능성을 위해 예산의 균형을 맞출 필요는 있음.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국악강사가 전체의 40%를 차지하여 국악 중심으로 진행됨.

〈표 2-1〉 2011~201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요 정책 사업별 예산

(단위: 억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학교문화예술교육활성화	536 (82%)	581 (73%)	616 (57%)	696 (60%)	693 (58%)	793 (61%)
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	90 (14%)	173 (22%)	223 (20%)	298 (26%)	297 (25%)	355 (27%)
문화예술교육 기반조성 및 기타	6 (1%)	5 (1%)	206 (19%)	117 (10%)	153 (13%)	92 (7%)
진흥원 운영비	24 (4%)	40 (5%)	44 (4%)	41 (4%)	49 (4%)	64 (5%)
진흥원 총예산	656 (100%)	799 (100%)	1,089 (100%)	1,152 (100%)	1,192 (100%)	1,304 (100%)

자료: 최보연 외(2017).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분석 및 개선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43쪽.

다. 문화예술교육의 원칙과 정책적 의미

□ 문화예술교육의 기본 원칙

- 문화예술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하고 있음. 즉,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이 문화예술교육임.
- 따라서 정부는 모두에게 평등하고 보편적인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는 모든 국민의 문화적 권리에 해당함.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조 제2항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적 의미

- 문화예술교육은 행위적 측면에서 보면 문화예술의 창작과 향유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권리적 측면에서 보자면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보장이 되는 문화적 권리에 해당하며, 시기적 측면으로 보자면 학교와 그 외의 모든 공간까지 아우르는 평생교육의 일환임.
-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적 가치에 국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문화예술교육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간의 공감과 소통을 촉진시키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공동체를 강화하는 사회적 가치도 충분함.
- 결론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며 나아가 국가 공동체 형성에 무형의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음.

2.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흐름

□ 문화예술교육의 단계적 흐름

- 문화예술교육은 크게 3기로 나누어 볼 수 있음. ‘국악강사풀제’가 시작되던 2000년부터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이전시기를 1기로, 2기는 2005년부터 2011년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3기는 2011년부터 2018년 이전까지로 볼 수 있음.
- 1기는 문화예술교육 태동기로 문화예술교육이 제도화되지는 않았으나 초·중등학교에 예술강사들이 파견되었던 시기임. 당시의 초점은 예술가의 보조적인 일자리 제공에도 맞추어져 있었음. 이는 지속적으로 논란거리이자 문제점이 됨. 이후 참여정부 들어서 문화향유능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003년에 문화행정혁신위원회 내 문화예술교육 TF를 설치하고 다각도로 논의가 진행됨.
- 2기는 문화예술교육 준비기로 문화예술교육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는 기간임.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어 본격적인 제도권 편입이 시작되었음.
- 3기는 문화예술교육 양적 성장기로 2011년에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개정되면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문화예술교육사가 양성되기 시작하였으며,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이 완료되었음. 이후 시기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양적 지표가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는 시기임. 한편, 양적 성장이 거듭될수록 질적 성장에 대한 아쉬움이 더욱 커지고 2000년 이래로 문제가 커져왔던 문화예술교육사의 고용 문제도 2016년에 수면 위로 부상되었음.

□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제도의 흐름

- 제도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시초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 2003년 참여정부 시절의 문화행정혁신위원회 내 문화예술교육 TF임. 이후 문화예술교육 준비기인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최초로 법률로 제정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문화예술교육 진흥기관으로 설립되었음.
- 2007년에 이르러 기초자치단체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27개소 지정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고 2009년에는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대체하였음.

- 2011년에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으로 문화예술교육사제도가 도입되었고, 2011년에 16개 시·도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지정되었음.
- 2013년에 이르러 국정과제 내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이 중장기 핵심 과제로 선정되었으며, 문화예술교육사를 최초로 배출하였음. 2014년과 2015년에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를 꾸준히 개선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지난 한 논의 과정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사가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문화예술교육 발전계획 수립: 총 5회에 걸친 계획 수립

- 2004년에 발표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은 문화관광부와 교육부가 주체가 되어 수립되었음. 이후의 계획에서 2010년을 제외하고 모두 문화 관련 주무부서에서 단독으로 수립하였음.
 - 종합계획에서 목표를 크게 4가지로 나누었는데,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개선과 양적 확대,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화 및 기회확대, 문화예술교육 가치·방향성 공감대 형성,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반여건 마련 등이었음. 키워드로만 살펴보더라도 학교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조화롭게 유지된 측면이 있었음.
 - 중점과제 역시 4가지로 개개인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민인식 제고, 창의 문화예술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사회적 자원의 효과적 활용과 상호연계를 통한 인프라 구축,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재교육 지원 등임. 이 역시 사회와 학교, 그리고 개인에서 사회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범위를 확보하였음.
- 2007년에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하였음.
 - 목표를 하나로 대폭 줄였는데, ‘문화의 세기, 문화시민 역량배양’ 이 그것임.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키워드가 제외되었다는 점,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문구에 그친다는 점이 아쉬움.
 - 전략은 4가지로 참여기회 확대 및 내실화, 사회적 소수자 문화적 권리신장,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지식정보 확충 및 국제적 위상 확보 등임. 전략 역시 문화예술교육의 수요자인 개인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 아니라 국가적 아젠다 설정에 보다 가까운 측면이 있음.

- 2010년에는 ‘창의성과 인성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방안’을 문화관광체육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발표하였음.
 - 비전을 ‘예술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강화’로 하고 목표는 별도로 없이 중점과제 6가지를 제시하였음.
 - 교육부와 함께하는 방안이다보니 학교중심의 과제가 선정되었음. 즉, 교과활동에서의 예술교육강화, 학교-지역사회 연계형 체험예술교육강화, 예술·체육 중점학교 활성화 및 확대, 각급 교육기관 예술심화교육지원확대, 과학-예술 통합교육 실시, 예술교육지원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등임.
 - 이중 예술교육지원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은 예술교육이 문화부의 영역을 넘어서 전 부처간 협력을 전제로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의미있는 진적으로 볼 수 있으며, 학교-지역사회 연계형 체험예술교육강화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여 영역 중심이 아닌 공간 중심으로 진화하였다고 볼 수 있음. 그 외에는 학교 영역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들로 교과부가 중심이 되어야 하므로 문화부는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2014년에 이르러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하며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장기 계획다운 계획이 발표되었음.
 - 문화체육관광부 단독으로 수립하여 발표한 이 계획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소통과 공감, 함께 나누는 행복’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음.
 - 박근혜 정부의 주요 키워드인 ‘행복’과 ‘소통’을 포함하였기에 목표에서도 ‘행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상생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내실화’를 내세웠는데 이는 다시 ‘일상화’, ‘지역화’, ‘내실화’라는 키워드로 요약이 됨.
 - ‘일상화’에서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사각지대 해소, 문화복지 구현을 위한 생활밀착형 예술교육이 추진전략이었음.
 - ‘지역화’에서는 지역중심의 프로그램 확충, 문화예술교육 전달체계 개선이 전략이었음.
 - ‘내실화’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문화예술교육 연구 확충, 국제교류, 협력 강조 등이 전략으로 선정되었음.
 - 다른 계획에 비해 2014년에 발표된 계획의 세부과제와 추진실태, 그리고 효과 등을 면밀히 측정해볼 필요가 있음.

3. 문화예술교육의 성과와 한계³⁾

가. 문화예술교육의 성과

□ 문화예술교육의 지속 확대

- 문화예술교육 예산의 증가를 통해 (05년 208억원→16년 1,760억원) 16년 기준, 연간 300만명 수혜, 8천여 명 일자리 창출하였음.
- 문화예술교육 참여학교는 05년 대비 2.8배, 참여학생은 3.7배 증가
※ (2005→2016) 학교 3,214→9,027, 참여 학생 71만명→289만명
- 유아부터 청소년, 직장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춰 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작
- 문화소외계층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방법 다각화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사각지대 해소 노력
- 교정시설,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등 지원대상 확대 및 움직이는 예술정거장(13년), 예술치유(15년), 문화파출소(16년) 등 사업 확대

□ 긍정적 변화 유도 및 문화 향유 저변 확대

- 문화예술교육 경험자는 개인의 행복감 및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비경험자보다 긍정적 결과
※ 2016~2017년 꿈의 오케스트라 신규단원 183명 연구 결과, 자존감·성실, 소통능력, 미래전망 등에서 개인발달과 인적 상호작용에서 유의미한 변화 도출
- 문화예술교육이 문화예술 수요층 확대에 기여
- 문화예술교육 경험 후 문화소비 지불의사 2배 상승

□ 문화예술교육 분야 국제사회 기여

- 2010년 제2회 유네스코 세계예술교육대회 성공적 개최 및 ‘서울의제(Seoul

3) 문체부,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2018~2022)

Agenda)’ 도출 주도

- 서울의제를 바탕으로 매년 5월 넷째 주 전 세계적으로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시행 중
- 문화예술교육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및 2018 평창 문화올림픽 일환으로 ‘아트 드림캠프’ 등 국제 협력 기여
- ODA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20013년 베트남 라오까이성의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사업이 있음.
- 평창올림픽 때는 겨울이 없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예술교육의 경험 확대 및 국내외 예술가, 청소년 간의 교류 추진

나. 문화예술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

□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공감대 미흡

-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 개념 및 범주 등에 대한 인식 차이가 발생하고, ‘문화예술교육의 목적과 가치의 모호함’에 관한 지적이 있었음.
-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지향점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 및 공론화 필요
- ‘지식교육’에서 ‘문화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당초 취지 고려
- 학교(공교육) 내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지위가 불안정함.
- 단일교과와 분야의 내용, 체계만 존재할 뿐 종합적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과 접근방식에 대한 논의와 구체적인 방법론 부재

□ 공급자·중앙 주도적 정책의 한계

- 정부 주도의 비약적인 양적 성장 및 지원대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중심의 중앙 주도적 사업 지원의 한계
-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지원방법 다각화를 하지 못하고, 예술강사 지원에만 치중하여 예술강사 처우문제 및 계약주체문제 쟁점화
 - ※ 20016년 학교 문화예술교육 예산 중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92.9% 차지
-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경우 문화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설정하여 특정 기관 및 시설 연계 지원에 치중하여 정책 접촉면 협소

- 중앙의 지침에 따른 하향식 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자율성 위축 및 정책대상별 수요 대응 한계
- 지역의 특성과 현장의 다양한 수요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

□ 문화예술교육의 수요파악 미흡 및 질적 관리 부족

- 현장의 요구와 수요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부족, 현장에 대한 섬세한 조사와 모니터링으로 수요공급을 맞출 필요
- 예술강사 또는 문화예술교육 단체의 교육 콘텐츠와 교육 역량에 의존하는 사업구조로 누가 교육하느냐에 따라 교육의 질 상이
 - 문화예술교육 내용이 알차져야 함(35.6%), 강사 전문성 제고(21.1%)
 - *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 우수 프로그램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질적 제고를 위한 장치 미비 및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관리 부족
 - 1년 단위 공모 사업 위주로 지원되어 성과가 축적되지 못하는 상황
 - 현장의 수요 및 요구에 부응한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위해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의 다각화 필요

□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미흡

- 중앙-지역간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및 협력체계 미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기반지원 및 협력연계 역할 강화와 함께 광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 역할 및 위상 강화 필요
 - 생활권(기초) 단위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하여 밀착화 필요
- 지역 예술단체, 문화시설 등의 특화된 자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부족
- 현 학교와 사회로 이원화된 문화예술교육 정책구조를 지역 내 학교-사회를 연계한 통합적 접근으로 전환 필요

4. 문화예술교육의 쟁점

가. 예술강사 고용 문제

□ 광역센터의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반납

- 2017년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9개 시도 광역센터에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권을 반납하였음.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2016년까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학교 예술강사가 계약을 체결했으나, 2017년부터 광역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각 문화재단에서 고용부담으로 반납하게 되었음.

□ 정책의 출발점부터 잘못된 문제 : 일자리 창출

-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국악풀제의 시작에서 비롯된 것처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었음. 당시에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문화예술인들의 생활 보조였을지 모르나 이명박 정부 들어 문체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위상이 공고히 되었음.
- 기본적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인 예술강사가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지가 의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 투입 필요.
- 결국 사업권 반납으로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위탁사업을 하게 됨. 이는 예술강사 입장에서 위탁사업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향후 경력증명을 위해 위탁사업체를 찾아야 하는 상황임.

□ 해결책은 없고 논의만 진행 중

- 예술강사 노조와 정부 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양측의 입장차가 커 쉽게 타결될 것 같지 않음.
- 논의가 길어질수록 피해는 예술강사만이 아니라 수혜자도 간접적으로 입을 수 있음.
-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의 본질적 목적을 명확히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음.

나.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교육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움

□ 실제 현장에서는 문화예술지원사업과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음.

- 교육을 위해 연극 한 편을 무대에 올리는 것으로 신청했으나 그 과정이 너무도 어려워 교육생에게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함.
- 교육과 창작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고 정책의 지향점도 달라야 함.
 - 교육생이 창작을 할 경우 그것은 교육의 일부여야 하고, 문화예술창작활동이 되어서는 안됨. 추후 중복지원의 여지가 충분함.
- 수혜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문화예술사업의 일부인지 문화예술교육의 일부로 참여하는지 명확한 구분을 하지 않고 할 필요도 없음.
 - 문화예술 동아리가 문화예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받는 활동은 본질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임. 실질적으로 한 밴드가 교육을 받아서 무대에 오른다면 그것은 무대의 성격에 따라 교육과 창작으로 나누어질 것임. 즉, 교육의 결과로 오르면 교육이고, 그들이 창작하여 오른다면 창작으로 봐야함.

□ 문제는 정책의 영역이 아니라 정책의 목표 구분 모호

- 생활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정책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정책의 영역이 아니라 정책의 목표가 다르다는 것임.
- 생활문화정책의 동아리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고 문화예술교육정책은 개인의 문화예술 교육을 돕는 것이 목표임.
- 따라서 정책의 영역이 모호하다고 혼동할 것이 아니라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따져 구분할 필요가 있음. 지원사업의 목적이 개인의 문화예술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 문화예술교육이며, 동아리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 생활문화임.

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지니는 한계: 제도화의 한계

- 사회적으로 가치가 인정되어 제도의 틀 안에 들어오게 되면 경직되고 생명력이 단축됨.
- 문화예술교육은 제도화를 통해 장르적 경직성, 내용적 경직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 비록 문화예술교육의 출발점이 국악강사풀제였으나 본격적으로 제도화 이전에는 다양한 장르가 인정되고 비교적 선명한 교육 지향점이 있었음.
 - 문화예술교육이 제도화되면서 문화예술교육의 장르가 명확하게 명시되고 일자리 정책으로 한 단계 더 변하면서 경직되기 시작하였음. 예술강사의 고용과 관련된 문제도 경직성으로 볼 수 있음. 도입 초기 생활비 보조 형식의 교육으로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문화예술교육강사로 생활이 안된다고 고용의 문제로 옮겨갔음.
 - 문체부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문화교육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오히려 더 모호한 분야로 팽창만 되고 끝날 수 있음. 문화예술교육이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고 유연하게 확장할 때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음.

III

2018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분석

Ⅲ. 2018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분석

1. 2018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 비전: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의 양적 성장에 가려져 질적 수준에 대한 회의와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서 비롯되었음.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은 일상 속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
- 비전 자체가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이나 구체적으로 이해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음. 개인의 삶에서 의미가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지향함.

□ 목표: 문화예술교육의 재도약

- 문화예술교육의 향후 5년간 목표는 ‘문화예술교육의 재도약-문화예술교육의 지속 성장과 질적 제고’로 잡았음.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하려는 의지를 담음.
 - 문화예술교육이 학교와 사회에서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을 의미함
 - 문화예술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인력의 전문성, 교육내용의 세밀함, 교육장르의 다양화 등 여러 요소에서 균형적으로 수준을 높여야 함
 - 제반 요소별로 균형적으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자체가 역량이 있어야 함. 광역센터 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관과의 다차원 협력체계 구축, 지역의 연구능력이 전제되어야 함.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적으로 ‘양적 성장은 이뤘지만, 질적 성숙을 이루지 못했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임. 하지만, 한편으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교육대상의 확대와 확산이 필요함.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양적 확대는 여전히 필요한 상황
-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높았던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경우에도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함.
- 문화예술교육을 전담하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한 교육뿐 아니라 문화시설에서 진행된 문화예술교육까지 정책영역을 확대함.



〈그림 3-1〉 2018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 추진전략:

-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인 분권과 자율에 맞춰 중앙에서 사업을 지역으로 내리는 탑다운 방식(수직적 전달체계)이 아니라 지역단위에서 문화예술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임. 중앙정부-광역시·자치체-광역시

단으로의 체계와 함께 기초 단위의 구심점을 통해 연계성·확장성 확보

- 중앙과 지역의 협력뿐 아니라 문화정책 내 생활문화 및 지역문화정책과 연계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이외 타 부처와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함.
- 수요자 중심 교육 다각화
 -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를 위해 유아부터 고령자까지 생애주기별 특성에 걸맞은 교육,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해야 함. 지금까지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사회 소외계층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된 바와 달리 향후 전국민 대상 정책으로 생애주기·사회적·지역적 여건 등에 따른 수요를 고려한 정책 설계를 할 것으로 예상됨.
 - 생애주기별 인구구조의 변화, 계층별 특성, 지역적 특색 등에 대한 현황과 향후 변화를 염두에 둔 정책방향 설정으로 해석됨.
 - 생애주기별 교육과 취약계층 교육이 교차하면, 적어도 문화예술교육에서 배제된 집단을 최소화할 수 있음.
 - 교육 수요자의 욕구가 진화됨에 따라 융통합 교육, 인문학 연계교육, 4차산업 혁명 연계교육 등을 계획함.
-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
 -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과 지속성을 위해, 그리고 행정체계의 분권화에 따라 중앙단위에서는 기획 및 연구역량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음.
 - 구체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통계 및 자료관리 체계의 고도화, 문화예술교육 연수의 체계화 및 전문화, 문화예술교육의 국제협력 강화, 문화예술교육의 가치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함.

□ 추진과제:

- 위의 세 가지 추진전략에 따른 추진과제는 모두 10개이며, 추진과제별로 세부 추진과제가 3~5개씩 부가되어 있음.
-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확대(추진과제 2-1),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다각화(추진과제 2-2)의 세부과제는 지자체 단위에서 실행됨.
- 나머지 세부 추진과제의 추진주체는 문체부와 지자체의 협력사업임.

- 중앙부처 간 협력에서는 기존의 교육부, 부처 간 협력사업 참여부처(국방부, 여가부, 법무부 등) 이외에 문화재청이 포함되었음.
- 문화예술교육 지원 다각화(추진과제 2-3)의 세부 추진과제인 ‘다양한 영역의 문화예술교육 추진’에서 문화재청이 포함된 것은 문화예술교육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의지가 엿보임.
- 지역기반 생태계 구축 전략의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생활권 중심의 기초지자체 단위 추진체계 구축 사업과 지역 문화예술공간 및 자원과의 연계 강화 등이 기대됨.

〈표 3-1〉 지역기반 생태계 구축 전략의 추진과제

추진과제	추진주체
1-1.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체계화	
1) 자율적 협업관점에서의 지역 중심 추진체계 개편	문체부
2)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육성기반 체계화	지자체
3) 광역센터 기능 및 역할 강화	문체부, 지자체
4) 생활권 중심의 기초지자체 단위 추진체계 구축	문체부, 지자체
1-2. 지역 문화예술공간 및 자원과의 연계 강화	
1) 창의적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전용공간 조성·운영 지원	문체부
2) 지역 내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공간 지원	문체부, 지자체
3)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 강화	문체부, 지자체
1-3 문화예술교육 협력망 활성화	
1) 중앙과 지역간 협력 강화	문체부, 지자체
2)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	문체부, 교육부 등
3) 문화정책 내 연계협력 강화	문체부, 지자체
4) 지역 중심 문화시설 및 타 영역과의 협력 강화	문체부, 지자체

자료: 『2018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문화체육관광부, 36쪽.

- 수요자 중심 교육다각화 전략의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으로 대상층이 세분화되었으나 여전히 ‘생애주기별’이라는 단어가 적합한지는 의문시됨. 또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는 세분화하지 않고 지속 지원이라는

단어로 대체했는데, 현재까지의 지원 대상으로만 한정한다는 느낌이 듦. 그 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이해 증진이나 문화예술교육 사회적 경제 지원 등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됨.

〈표 3-2〉 수요자 중심 교육다각화 전략의 추진과제

추진과제	추진주체
2-1.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	
1) [유아] 유아대상 창의놀이교육 확대	문체부, 지자체
2) [아동청소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제도개선으로 질적 내실화	문체부, 지자체
3)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다각화	문체부, 지자체
4) [청년·중년] 직장인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	문체부, 지자체
5) [장년·노년]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체부, 지자체
6) [전 연령층] 자발적·주체적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	문체부, 지자체
2-2.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속 확대	
1)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속 지원	문체부, 지자체
2)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 강화	문체부, 국방부, 여가부, 등
3) 치유와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체부
2-3. 문화예술교육 지원 다각화	
1) 다양한 영역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문체부, 문화재청
2) 통합·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	문체부
3)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문체부
4)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이해 증진	문체부
5) 문화예술교육 사회적 경제 지원	문체부

자료: 『2018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문화체육관광부, 36~37쪽.

-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 전략의 세부 과제들을 보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개선의 경우 치우 개선 문제와 함께 다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며, 문화예술교육ODA사업 확대의 경우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인만큼 연계하여 대폭 확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아울러 문화예술교육 홍보에 대한 문제도 시민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펼쳤으면 함.

〈표 3-3〉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 전략의 추진과제

추진과제	추진주체
3-1. 기획 및 연구역량 강화	
1) 문화예술교육 연구 개발 활성화	문체부
2) 문화예술교육 통계 및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지자체
3)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정책 대응 및 전략 구축	문체부, 지자체
4) 문화예술교육 정책협의체 활성화	문체부, 지자체
3-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	
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경력개발 지원 체계화	문체부
2) 문화예술교육 연수의 체계화 및 전문화	문체부, 지자체
3)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협력 활성화	문체부, 지자체
4)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개선	문체부
5) 협력 관계자 대상 문화예술교육 연수 체계화	문체부
3-3.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활성화	
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국제적 역량 강화	문체부
2)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 확대	문체부
3) 국제사회에서 협력 및 리더십 강화	문체부
3-4. 가치 확산 및 홍보 강화	
1) 대국민 문화예술교육 홍보 활성화	문체부
2) 문화예술교육 인식 확산	문체부
3)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관을 통한 가치 확산	문체부

자료: 『2018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문화체육관광부, 36쪽.

2. ‘2018종합계획’과 광주광역시의 대응 방향

□ 문화예술교육을 지역에서 주체적으로 수용 필요

- 광주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출범하여(2009),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자주 언급되면서 지금까지 역할을 수행하였음.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의 우수 사례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체계의 지역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지역의 기획력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경우 ‘경자씨와 재봉틀’ 등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프로그램을 곧잘 기획하여왔음.
 - 문화예술교육 정책체계의 지역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광주에 적합한 교육체계를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주도할 필요가 있음.
- 광역센터에서 진행 중인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토요문화학교’에 대한 평가와 문체부에서 실시하는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등의 광주시 내 진행 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광역단위의 사업과 중앙단위의 사업을 평가하여 지역 역량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어떤 점을 최대화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함.

□ 광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역할 재구성 필요

- 광주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문화예술교육과 광주시 관내의 다양한 주체들이 실시하는 문화예술교육 파악 급선무
 -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의 문화예술교육자원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된 적이 없음. 문체부에서 발간하는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역시 지역내에서 검증이 이루어진 적이 없음. 이를 총괄하여 파악하는 것이 필요
- 종합계획에서 광역센터의 역할들을 보면 한 단계 격상된 위상정립이 필요. 단순히 프로그램을 분배하고 중앙정부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요구에 맞게 재구성이 필요함.

-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현재 요구되는 능력은 중앙정부의 사업 집행능력임. 하지만 종합계획에 따르면 이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내에서 지역의 역량을 파악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획역량이 필요함.
- 시청과 교육청의 상호관계를 좀 더 유연하고 실질적으로 진척시킬 필요가 있음.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는 것으로는 실질적 효과를 얻기 어려움.
- 여기서 광주평생교육진흥원까지 포함하면 더욱 좋음.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도 매해 커지고 있어 포괄적인 차원에서 넓은 네트워크 형성 필요.
- 광역센터가 주축이 되어 광주시의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 단체, 시민단체 등과 협업과 소통이 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함.
- 광주시에서 활동 중인 문화예술교육사 등이 새로운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체계를 형성하는데 적극 참여하도록 함.
-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인력 충원을 강력히 추진해야 함. 현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원 충원 등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변화된 역할과 위상에 맞게 합리적인 인원 충원이 필요함. 아울러 필요한 경우 광역센터의 독립화도 추진해야함..

□ 생활권 단위 문화예술교육의 선제적 실시

- 종합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생활권 단위 문화예술교육을 선제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생활권 단위를 임의적으로 나누어 보고 실질적인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검증해 보고 생활권 단위를 수정해야 함.
- 생활권 단위의 문화예술교육은 시민의 입장에서 굳이 원거리 이동을 하면서 문화예술교육을 접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일상에서 쉽게 접하게 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임.
- 현재 광주시의 특성상 문화예술교육의 수혜 의지가 있으면 어디서라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임.
- 하지만 교육 참여에 소요되는 시간은 거주지에 따라 편폭이 클 것으로 추측됨. 생활권 단위 문화예술교육은 거주지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간의 편폭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함.

- 이를 위해 생활권에서 활용 가능한 문화예술교육자원과 잠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자원을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광주시 브랜드 문화예술교육 사업 기획 및 실시

- 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광주시의 특징 및 장점을 살린 대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광주시의 대표 브랜드가 되어 전국적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해야함.
- 가령 광주시는 국가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하려는 계획이 있음. 따라서 종합계획에서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하여 아시아 여러 나라와 관련된 ODA 사업을 단계별로 계획하여 교육모델을 개발하여야 함.

IV

타시도 문화예술교육 사례 분석

IV. 타시도 문화예술교육 사례 분석

1. 사례 분석 대상 선정

□ 광주시와 유사한 광역시이거나 특성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광역도 선별

- 정부 종합계획에서 지역 기반의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향후 지역의 특색을 드러내고 지역기반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광주시와 유사한 환경의 자치단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광주시와 행정구역 단위로 유사한 부산과 대구 중 지역적 특색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잘 담고 있는 부산을 사례분석 대상으로 선정
- 부산에서는 세계문화유산과 부산의 지역 음악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할 예정임. 부산의 사례에서는 지역적 특색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에 담는 방법을 탐구할 예정임.
- 광주시와 행정적으로 유사하지 않지만, 생애전환형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영역확장에 힘쓰고 있는 경남의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할 예정임.

□ 기초자치단체 중 유의미한 사례나 성과가 나타난 곳을 선별

- 현재 기초자치단체 중 문화예술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단체는 성남시가 유일함.
- 또한 성남시의 경우 성남형 문화예술교육을 표방하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과 달리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고 있음.
- 교육지청과 협의하여 학교에서 시행하는 교육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음.
- 향후 종합계획에서 기초자치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한 만큼 기초자치단체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성남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문화정책과의 연계도 살펴 문화예술교육의 확장 방안에 대해서도 분석

2. 부산시: 부산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문화예술교육

□ 부산시 문화정책에 기여하는 세계유산 시민아카데미

- 전국에서 부산만 유일하게 남았던 6.25 피난시절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고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의 동참이나 인식 제고를 위함.
- 시민 인문학아카데미 형식으로 ‘강좌’, ‘피난 야행 길 걷기’ 등 약 6가지 강좌가 있음. 장소성이나 건물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임.
- 특이한 점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과정의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교육 프로그램임. 정식명칭은 세계문화유산 시민아카데미임.
- 시의 위탁사업으로 올해는 안하고 작년 1년동안 한 사업임. 예산은 3천만원 정도이며, 이를 통해 부산시 문화정책에 기여했다고 생각함.

□ 어린이 무형문화재 교실: 지역특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 처음에는 엄마, 아이 등 청소년 이하 어린이들 대상 문화재 탐방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교육으로 개발을 해서 교실로 해서 방과 후 학교에 공급하면 좋을 것 같아서 15차시 프로그램으로 처음 실시
- 춤으로는 동래학춤이 있으며, 가락으로는 부산농악, 놀이로는 수영야류가 있음. 이들 무형문화재의 문화재 이수자, 문화예술교육연구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전문가로 구성하여 차수, 내용 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했었음.
- 장소는 학교,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방과후 활동, 정규교과에 하나씩 꼭 넣도록 교육청과 협력
- 문화재 전수 조교가 현장 강사로 활동, 학교는 시수를 배정해주고, 교육청은 학교를 배정해주고, 재단은 예산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
- 문화재 전수관에서는 연구개발진에 참여하고,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전수조교는 학교강사로 참여하고, 교육청, 학교, 문화재단, 전수관 4개의 기관이 협업하여 15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임.

- 성과는 지역 아이들의 성장과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남. 아이들이 매우 즐거워함. 자아의 자존감이나 아이들이 표정이나 성격의 변화가 있음. 문화예술교육의 교육적 성과가 매우 강하게 나타남. 학교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70%이상 무형문화재 전수조교들 강사비로 나감. 한시간당 4만 원이 조금 넘음. 한 사람당 15개 학교에 2명씩 나가므로 30명의 일자리가 생김.
- 농악이 인기가 많음. 농악이 6~7개고, 학교당 프로그램은 1개임.

□ 전문인력양성은 꾸준히 실시

- 부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꿈다락 등)의 단체 신청이 약 100~120개 들어옴. 이들 단체들의 역량이 곧 부산 문화예술교육의 역량임.
- 작년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했음. 파일럿 프로그램, ABC스쿨 등으로 인력의 숙달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개발함.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사업비로 기획 사업 일환으로 역량강화 사업 트랙 하나 만들어서 진행하였음. 역량강화 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들에게 실습할 수 있는 공모사업도 들어있음. 올해 58명이 수료하였고 수료자를 대상으로 인큐베이팅 공모사업을 실시함. 문화예술교육을 키우는 사업으로 예산 1000만원 들어서 10차수 짜서 실습 공모사업이 있음.
- 기존 프로그램 선생님들에게는 ‘자율연구모임 지원’ 수료자 중 전문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해 6차수의 연수를 들은 사람을 대상으로 원하는 팀에게 1년에 200만원 정도 자율연구모임으로 구성하여 지원
- 지역의 문화예술교육단체들이 역량을 키워나가는 사업으로 공모지원을 하고 공모지원을 수행하는 단체들에 역량을 키워나가는 사업을 별도로 해서 연결을 하고 있음.
- 꿈다락 토요학교 사업이 8억에서 18억으로 예산이 늘어났음. 수행단체의 역량도 부족해서 부실 방지를 위해 하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 간 문화예술교육자원의 불균형 문제

- 부산은 2010년도에 부산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를 했었음. 공간, 유관기관, 사업, 예산 분류를 지표를 통해 조사를 했었음. 약 1,200개 정도
- 문화원, 청소년지원센터, 무형문화재전수관, 복지관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음. 각 분포도를 보고 향유기관과 수행단체 간 매칭을 해줌.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분포도도 일정비율 균형이 잡혀야함. 표준화되게 지역균형의 조정은 함.
- 문화예술교육에서 문화재단은 사업주관 단체로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수행함. 문체부와 진흥원은 거버넌스 협치, 협업의 역할 기능에 대한 협의가 중요함. 간단하게 수행단체와 문화재단의 공통지점이 있어야하고 관리자의 개념으로 가면 안 됨. 문화재단과 수행단체 간 밀접한 소통이 있어야 함. 중간 워크숍을 통해 소통, 간담회 시간을 가짐. 현장문제 등도 듣고, 친목도모가 중요함.

3. 경상남도: 문화예술교육의 영역 확산

□ 예술꽃씨앗학교에서 나타난 문화예술교육의 정체 현상

- 예술꽃씨앗학교는 2008년부터 문체부에서 시작이 되었음.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약 10년이 되었음. 지금은 10주년 컨퍼런스도 준비 중에 있음.
- 초기에 예술꽃씨앗학교는 재미가 있었음. 아기자기하고 모델이 될 수 있는 참신한 프로그램이 많았었음. 약 100개교정도 양적으로 점차 늘어나다 보니 특색 있는 학교를 보기가 드물어짐.
- 예술꽃씨앗학교가 기존에 추구하고자 하는 원래의 모습이나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례들보다 학교나 지역이 갖고 있는 환경이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나와줘야하는데 단순 획일적으로 비슷비슷한 사례들이 운영되고 있어서 컨설팅을 통해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여 이번 컨퍼런스도 하게 됨.
- 예술꽃씨앗학교는 '앞으로의 10년 그림'을 그릴 때가 되었음. 지금은 국악, 오케스트라 중심의 악기 위주 프로그램으로 활성화되어있음. 오케스트라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아님.
- 다양화가 필요함. 각 지역이나 학교 특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좋겠음. 양이 많이 늘어나면 희귀성이 떨어짐.
- 첫째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씨앗학교는 몇 학교 안되다 보니 존재감 상승이나 모델이 될 수 있었는데, 점차 많아지면서 희귀성 떨어짐. 전국 학교 수에 비해서는 적은편이지만 교과부도 나름대로 학교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부분과 차별화된 전략들이 필요함.
- 광역센터에서 각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모든 문화예술교육 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지임.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수가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인데 타 장르나 프로그램과 비교될 수 있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함.
- 양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퀄리티 질적인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고 있으니 이런 전략적 방안이 필요함.

□ 네트워크 활성화 지속의 어려움

- 광역센터를 운영할 때는 포럼, 세미나, 문화예술 축제 관련 등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다양하게 했었음.
- 현재 꿈다락학교나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사업을 묶어 각 지역별로 문화예술 교육 축제, 파티의 개념으로 경북이나 대구에서 행사를 하고 있음.
- 각 기관별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나게 해주고, 만남의 장을 만드는 것을 문화예술교육 축제, 파티로 운영이 됨.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들어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음.
- 지금 현재의 네트워크 활성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애매모호함.
- 컨설팅을 하면서 전국 단위로 다니다보니, 경남에 국한하지 않고 전남, 경북, 울산, 대구, 대전으로 많이 감.

□ 경남형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학교: 쓸만한 학교

- 지금까지 문화예술교육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비중이 70%이상 차지했었음. 본인은 사회문화예술교육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함. 학교보다 사회에 속해 있는 구성원이 많다 보니 학교 외에 사회의 다양한 각계각층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문체부에서는 직장인, 근로자, 아동복지센터, 노인복지센터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은퇴를 앞둔 직장인이나 은퇴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인 ‘쓸만한학교’는 지역의 유명인들(무용수, 시인, 예술가)을 대상으로 토론하고, 강의하는 것임.
- 구체화되고 체계화되어서 진행이 되면 은퇴 후 제2의 삶을 추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사실 경남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는 어려움. 전국단위에서 광역센터에서 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예술강사지원사업의 문제점과 도서벽지 지역의 교육권

- 예술강사지원사업은 광역센터가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임. 처음에 문제부가 예술강사지원사업을 광역센터로 이관했다가 노조나 4대 보험 문제가 생기면서 골치 아파져서 손을 놓았음. 일부 전국에 있는 광역센터에서는 손을 놓고 있음.
- 예술강사지원사업은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2014년부터 예술강사지원사업의 노조가 결성되면서부터 시끄러워짐.
- 장기적으로 보면 예술강사지원사업이나 큰 단위 사업은 재단이나 큰 기관에서 운영이 되어야 함. 그러다 보니 재단의 직원들이 업무 과부하가 걸려 비효율적으로 일이 진행됨. 광역센터가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 상황임.
- 섬 지역으로 강의를 나가는 강사에게는 처우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예술강사지원사업도 보파리 강사가 아니라 예술가로서 예술 자질을 갖춘 강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함.
- 광역센터는 형식적인 워크숍이 아닌 예술강사들과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자리(워크숍, 세미나) 즉, 예술강사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주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 문화예술교육이 생겨난 지는 얼마 되지 않음. 2005년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하면 약 13년정도 됨. 지역으로 대량으로 퍼지게 된 것은 2008년 12월 정도이며 약 10년임.
- 그동안 양적으로 많이 팽창해왔음. 11~15년 때 전문성 제고인 질적성장에 대한 토론회가 많았었음.
-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사업과 문화예술교육사업은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함. 지원사업은 1,000~2,000만원으로 단위가 큼. 문화예술창작활동사업은 200~300만원 수준에 그치며 많아야 1,000만원임.
- 기존에 문화예술 창작활동 하던 분들이 문화예술교육사업에 많이 뛰어들다 보니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개념이나 취지, 전문적 이해가 없이 사업에 뛰어들어 혼선을 빚게 됨. 창작활동인지 교육사업인지. 그래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세미나, 워크숍, 아카데미가 많이 있었음. 지역단위에서 하기에는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음.

- 광주를 사례로 들면 ‘광주 청년기획자 양성사업’은 좋은 사례라고 생각됨. 광역센터에서도 지원, 관리, 감독을 뛰어넘어 다양한 청년 기획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야 하지 않을까 싶음. 지역에 많은 인력들 배출하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함. 그런 프로그램들은 다양하게 시도할 필요가 있음.
- 이것은 광역재단들의 역할임. 재단에서 단체들과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간다면 하는 게 좋을 것. 광역센터에서 다 해 나가는 것은 힘들. 형식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자유롭게 프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섭외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가는 형식 등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데 좋을듯함.
- 예술강사나 기획자들이 사업이다 보니 사업을 따내서 운영을 하다 보니 사업을 따내고 나면 안주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음. 문화예술교육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새롭게 봐야함.
- 문화예술교육은 노인, 장애인, 어린이, 학생, 일반주민 등 수혜자를 위한 사업임. 예술장르의 기능과 특성을 수단과 방법을 써서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새로운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시민으로 바꾸어주는 활동들이라면 기획자나 예술강사는 매개자 입장에서 깨어나 있어야함. 계속 자기 발전을 해야 함. 다양한 사례들도 접해야함.
- 특히 지역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미미한 편임. 광역센터에서 이런 것을 개발하기엔 인적자원의 한계가 있음. 문체부나 진흥원 중앙정부차원에서 역량강화 제고 관련 세미나를 많이 했었지만 한계가 있었음.
- 지역의 문화단체나 문화기획자와 같이 협력해서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이 좋을 듯. 광역센터가 중심이 돼서 가지만 광역센터가 그 많은 일을 하지는 못함. 형식적으로만 일을 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광역센터가 문화권력 집단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사례를 찾고 다양한 사람을 네트워킹해서 새로운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는 활동들이 필요함. 그것이 광역센터 또는 재단의 역할이 맞다고 생각함. 초기에 재단들이 문화권력 집단으로 활동해왔었음.
- 광역재단이나 센터가 정말 지역의 다양한 인재들을 발굴하고 손잡고 새로운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축적해서 아카이빙 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정보 및 시설 등을 수혜자들에게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함.

4. 성남시: 기능형 교육에서 탈피, 성남형 모델 개발

□ 기초문화예술교육센터로 출발하게 된 계기

- 300억 정부지원으로 폐교된 영성중학교를 리모델링해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 성남시 전체를 관할하다 보니 본도심에 대해 소홀해진 감이 있어. 지역별로 넓혀갈 계획
- 기초를 만든 이유는 중앙과 광역에서 예산을 내려보내는데 문제가 발생. 지역 특성과 맞지 않음. 예산은 낭비고 만족도는 적고 하다보니 중앙과 광역을 거부하고 성남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함.
- 성남형 인력 양성(중앙은 기능교육만 하고 끝, 사람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질을 높여주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양성)
- 본도심은 수정구와 중원구, 신도심은 분당과 판교. 교육과 경제적인 여유로 나눌 수 있을 뿐 문화 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음. 수준이 있는 사람은 서울로 나감.

□ 대상 특정형 문화예술교육 실시

- 2013년에 성남아카데미의 정체성을 찾고 그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미션이었음. 방문자 연령과 지역을 조사했음. 조사해 보니 분당이 85%, 중원과 수정이 5%, 송파, 광주, 용인 등에서 10% 정도 되었음. 연령대는 55세 이상이니 90%에 육박하였고, 다음으로 아이. 가장 취약한 계층이 청소년 계층이었음. 15세에서 25세가 0%.
- 그래서 타깃을 15세에서 25세로 하고 접근하기 시작. 아이들이 학원 다니기 바빠서 끌어오기가 어려웠음. 10시부터 13시까지는 성인강좌, 15시부터 19시까지는 아이들, 19시부터 21시까지는 성인(직장인 대상)이었음. 학교를 직접 컨택하고 프로그램을 짜서 가지고 들어갔음. 더군다나 유료로 운영하였음. 문화예술은 공짜라는 인식이 남아 있음. 따라서 유료로 운영.
- 초반에 퀄리티를 보여주기가 힘들었고, 학교에서는 아이를 학교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은 안됨.

- 유료가 강사료 9만원(교육청 학교예술강사가 3만원일 때), 1회 특별 강사는 30만원.(원래는 100만원) 그래서 찾아가는 교육으로 학교 안으로 들어감. 시설중심이 아니라 콘텐츠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육이 가능. 수정구나 중원구에서는 관심이 없음. 분당은 연수를 안해줘도 깨어 있음.
- 영화 한 편 못 보는 학생들이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알바를 해야 함. 때문에 학교 현장으로 들어감.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은 학교 선생님들 부터

- 교사연수 프로그램 시작. 교장/교감의 인식전환을 위해 연수 시작.교육청 장학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 실시. 행정실 선생님을 위한 프로그램 시작.
- 강사를 전문인력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 시작.(서울과 가까워 서울 강사들이 성남을 지배하고 성남의 인력은 실력이 안됨.)
- 2014년에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성남시에 생김(청소년육성재단 소속으로) 혁신학교나 이런데서 프로그램을 짜서 억단위로 지원해 줌. 북극점, 청바지 등의 프로그램이 생김. 그래서 여기에 문화예술교육도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 그러나 학교에서 300만원이라는 저조한 예산으로 진행하기 어려움.
- 선생님들은 행정도 싫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짤 수도 없고 강사 섭외도 어려움. 하지만 전교생 수영강의 프로그램은 간단히 해결되어 예산의 대부분을 사용.
- 그래서 학교를 컨택하지 않고 성남형교육지원단을 직접 컨택, 하지만 계약관계로 되어서 성남문화재단이 을이 됨. 현재는 재단과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단이 협력해서 돌아가고 있음.
- 교육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진행이 가능. 똑같은 월급을 받아가며 일을 하는데, 교육은 현장과 부딪히며 가야되는 것이 어려움. 그러다 보니 내부에서 많이 힘들었음.
- 의무와 책임이 있어야 가능. 신도시와 본도심의 격차 해소가 우리의 미션임. 빈자리 남는다고 소외계층을 넣어주면 안됨. 빈곤층 중에 부유층이 된 것이 소외

계층임. 평생을 돈을 모아서 VIP좌석에 앉은 독일의 노부부를 보며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됨. 문화의 가치를 알고 문화를 향유하려는 이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

□ 수요자(학교)가 원하는 프로그램 개발

- 해외캠프에서 2명이 신청을 했는데 저소득층이었음.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더니 우리는 무료 아니라고 되물음. 가장 취약한 아이들은 틈새계층, 이들을 위해서는 정책도 없고, 예산도 없고, 소외계층보다 소외되고 있는 아이들. 틈새계층은 부끄러워함. 저소득층은 무료라고 당당하게 생각함. 정치인이 이들을 이용해서 표를 얻는데 씬.
- 특수교육대상의 문화예술교육을 특화하는데 노력하였음. 교육연극이라는 것을 처음 실시. 국어사회도덕 세계사 등을 엮어서 연극으로 꾸밈. ‘난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극을 실시. UN연설로 수업을 하고, 연극하는 사람이 어눌한 발음으로 난민 역할로 분함. 아이들이 나중에 난민 역할을 겪으며 이해하도록 함. 이 아이들이 하기 위한 것이 무엇일지를 쓰고 있음.
- 프로그램은 자체 개발(전문인력 풀), 방과후교육, 창체교육 등은 지속적으로 될 수 없으니 교과와 연계하면서 개발. 그래야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음. 교과와 가장 가까운 예술형태가 연극. 연극 협의회에서 교사들을 연수하여 교사와 예술강사가 프로그램을 만들.
- 문화예술교육사를 위한 전문인력 교육은 이대와 협조해서 실시함. 교육에 대한 기초를 습득해야 하며, 교육대상에 따라 프로그램을 달리해야 함.
- 좋은 문화예술교육강사를 발굴하는 것도 센터의 임무. 현장실습을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
- 지금까지의 교육은 예술을 위한 교육임. 즉, 기능교육으로 기능 습득과 전달에만 초점을 맞춤. 하지만 박근혜 정부부터 문화예술을 통한 교육이 시작하였음. 주로 치료 쪽으로 집중(음악, 미술, 체육 등) 이제 학교쪽으로 인성교육으로 자리를 잡고, 문화재단에서는 생애주기별로 교육함. 큰 틀에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생활형 문화예술교육쪽으로 방향을 전환.

-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누구나(6천명) 교과연계된 교육형 체험 관람, 미술교과와 과학교과를 연계하는 프로그램 등 6천명에 대한 입장료를 지원단에서 대신 내줌. 그 외 중3은 오페라 관람 무료 혜택을 주고 있으며 3년째 진행 중.
- 찾아가는 공연을 통해 학교에서 공연비를 받고 진행함. 체험할 수 있는 공연으로, 교육청으로 원클릭으로 만들어서 신청.

V

광주시
문화예술교육
현황

V. 광주시 문화예술교육 현황

1.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현황

□ 광주시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자체 학습 공간 보유비율은 낮음.

- 광주시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 내 학습공간 비율은 8.2%로 광역시 평균 9.9%보다 낮고, 전체 평균 12.7%보다 낮음. 대부분 학습공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반해 부산 17.6%, 인천 18.5%, 대구 12.2%, 대전 12.6%로 광주시에 비해 많게는 2배 넘게 차이가 나고 있음.
- 다만, 학습 공간 보유 여부와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과는 연관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왜냐하면 문화예술교육의 경우 음악, 공연의 경우 무대를 갖추고 음향 장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학습 공간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 학습 공간 보유 현황과 교육 프로그램의 매칭여부를 파악하여 좋은 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 수립 필요

〈표 5-1〉 광주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 내 학습 공간 보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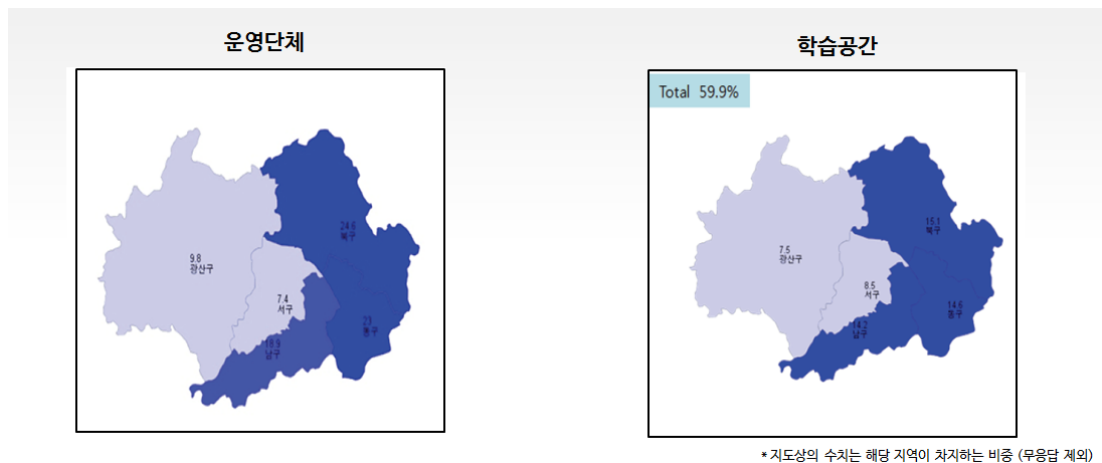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보유	비보유	무응답/해당없음
전체	(2,053)	12.7	83.9	3.4
광역시	(903)	9.9	87.4	2.8
광주	(122)	8.2	82.0	9.8
서울	(267)	2.6	97.0	0.4
부산	(108)	17.6	78.7	3.7
대구	(90)	12.2	85.6	2.2
인천	(108)	18.5	78.7	2.8
대전	(111)	12.6	87.4	0.0
울산	(72)	8.3	91.7	0.0
세종	(25)	8.0	80.0	12.0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7). 『2017지역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연구』

□ 광주시 문화예술교육단체는 동구와 북구에 47.6%가 있음.

- 광주시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북구 24.6%, 동구 23.0%, 남구 18.9%, 광산구 9.8%, 서구 7.4% 순으로 나타남.
- 운영단체의 소재지 자체가 자치구 간의 문화예술교육의 편차를 나타내는 지표는 아님.
- 광주시 문화예술교육 학습공간을 살펴보면 북구 15.1%, 동구 14.6%, 남구 14.2%, 서구 8.5%, 광산구 7.5%로 나타났음. 운영단체 소재지보다 편차가 적은 수준이기는 하나 여전히 광산구와 서구에는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학습공간 역시 자치구 간의 문화예술교육의 수준 편차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하기는 어려움. 다만, 추후 공간 배정에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임.



〈그림 5-1〉 광주시 운영단체(좌) 및 학습공간(우) 입지 현황

〈표 5-2〉 광주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 및 학습 공간 입지 현황

(단위: %)

구분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기타
운영단체	23.0	7.4	18.9	24.6	9.8	1.6
학습공간	14.6	8.5	14.2	15.1	7.5	6.6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7). 『2017지역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연구』

□ 문화예술교육 수강기관으로는 공공기관 부설기관(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이 40.2%로 가장 높음.

- 다음으로 학원, 사회(평생)교육원이 20.5%, 교육방송 및 인터넷 사이트가 19.7%, 동호인 모임 등이 17.1%, 개인 레슨이나 아는 사람에게서가 14.5%, 직장에서 받은 교육이 12.8%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부설기관의 경우 홍보채널과 공신력 부분에서 높기 때문에 응답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사설문화센터, 사설학원 등은 비율이 낮지만 질 높은 교육을 제공받는 이들이 수강했을 가능성이 높음.

□ 교육방송이나 인터넷 사이트도 13.5%로 높은 비율을 보임.

- 교육방송과 인터넷 사이트는 면대면 서비스가 아닌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로 수강생들의 공동체성이나 지역 내 인프라 활용성 측면에서 다소 떨어짐.
- 이들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하여 향후 다른 형태의 서비스에 피드백해야 함.

〈표 5-3〉 광주 문화예술교육 수강 기관 현황

수강기관	케이스 퍼센트(%)
직장에서 받은 교육, 훈련	8.8
학원, 사회(평생)교육원 수강	14.0
공공기관 부설기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원 등)	27.5
사설단체 부설 문화센터 (백화점, 신문사 등)	6.4
사설학원, 강습소	5.8
개인 레슨, 아는 사람에게서	9.9
동호인 모임 등에서	11.7
교육방송(텔레비전, 라디오) 및 인터넷 사이트	13.5
기타	2.3
합계	100.0

*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 교육 수강 경험이 있는 사람에 한함, 복수응답

자료: 광주문화재단(2016). 『광주문화지표조사 결과보고서』, 203쪽.

□ 광주시 문화예술교육 주체는 협동조합과 미술관의 비율이 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광주시 문화예술교육단체 112개 중 가장 많은 단체는 민간운영단체로 56.6%에 달함. 서울(70.4%), 울산(61.1%), 부산(60.2%)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광역시 평균 58.8%와 유사한 수준으로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아님.
- 다만, 협동조합이 9.8%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위권은 대전으로 6.3%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또한 광역시 평균 4.4%, 전체평균 4.3%로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 미술관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광주시가 4.9%의 비율인 반면, 2위권인 부산과 대전이 0.9% 수준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아쉬운 점은 공공도서관이 0.8%로 낮은 수준이며, 지방문화원의 경우 0.0%로 매우 낮음. 이는 추후 기관 연계에 있어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임.

〈표 5-4〉 광주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 성격분류 현황

(단위: %)

	사례수	민간 운영 단체	연구소 / 연구회	협회	협동 조합	지방 문화원	박물관	미술관	문화 재단	문화의 집	공공 도서관	기타
전체	(2,053)	54.7	9.9	7.4	4.3	2.5	2.0	1.5	1.5	1.4	1.0	6.7
광역시	(903)	58.8	10.4	6.9	4.4	2.0	0.7	0.9	1.4	0.9	1.2	6.3
광주	(122)	56.6	6.6	5.7	9.8	0.0	0.8	4.9	3.3	1.6	0.8	5.7
서울	(267)	70.4	9.7	6.7	2.6	0.0	0.0	0.0	2.2	0.0	0.0	4.1
부산	(108)	60.2	13.0	2.8	3.7	2.8	0.0	0.9	0.9	0.0	1.9	8.3
대구	(90)	57.8	10.0	15.6	3.3	2.2	0.0	0.0	0.0	0.0	0.0	3.3
인천	(108)	57.4	5.6	2.8	3.7	0.9	0.9	0.0	1.9	0.0	7.4	9.3
대전	(111)	38.7	15.3	8.1	6.3	8.1	0.0	0.9	0.0	2.7	0.0	11.7
울산	(72)	61.1	12.5	2.8	2.8	2.8	1.4	0.0	0.0	4.2	0.0	4.2
세종	(25)	32.0	20.0	24.0	4.0	4.0	12.0	0.0	0.0	0.0	0.0	4.0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7). 『2017지역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연구』

2. 문화예술교육 수요 현황

□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은 영화가 11.7%로 가장 높고, 향후 1년 이내 참여의향도 영화가 13.5%로 가장 높음

- 경험률은 영화 외에도 인문학 강좌 및 문화유산 탐방(10.7%), 문학(10.6%), 미술(7.2%) 순으로 나타남.
- 향후 1년 이내 예술교육 참여의향 역시 경험률과 비슷하게 영화(13.5%), 인문학 강좌 및 문화유산 탐방(12.4%), 문학(11.9%), 미술(9.6%) 순으로 나타남. 다만, 순서는 비슷하나 전반적으로 비율이 경험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만족도 측면은 경험률이나 참여의향과 다소 다른데, 기타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분야가 무용(75.0)과 서양음악(75.0)이 가장 높았으며, 문학(74.0), 대중음악/연예(73.3), 영화(71.8) 순으로 나타남.

〈표 5-5〉 광주 문화예술교육 강습 현황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	만족도 (100 점 만점)	향후1년 이내 예술교육 참여의향(%)
문학(독서포함)	10.6	74.0	11.9
미술 (사진, 건축, 디자인 포함)	7.2	68.5	9.6
서양음악 (클래식, 서양악기 관련)	3.0	75.0	4.3
전통예술 (국악, 풍물, 민속극)	1.9	70.0	2.4
연극	3.5	64.5	5.2
뮤지컬	2.8	65.0	4.8
무용 (서양무용, 한국무용 등)	0.4	75.0	0.7
영화(비디오 포함)	11.7	71.8	13.5
대중음악(가요콘서트), 예(방송프로그램 등)	2.8	73.3	4.4
인문학(역사) 강좌 및 문화유산 탐방	10.7	70.8	12.4
기타	1.3	78.5	1.3

자료: 광주문화재단(2016). 『광주문화지표조사 결과보고서』, 202쪽.

□ 문화예술교육에서 보완 사항으로는 내용이 알차야 한다가 25.7%로 가장 높음.

- 다음으로 ‘체험과 실기 위주가 되어야 한다.’(19.4%), ‘수강비용이 저렴해야 한다.’(16.7%), 강사들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13.9%), ‘프로그램이 다양해야 한다.’ (11.1%) 순으로 나타남.
- 응답률 상위권에 오른 보완사항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의 질적 성장에 대한 요구가 높음.
 - 내용이 알차야, 체험과 실기 위주, 강사들의 전문성 제고 등은 교육의 질적 부분과 밀접한 사항들로 이에 대한 보완을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함.
- 교육시설과 환경, 수강인원에 대한 비율은 각각 6.9, 4.9로 매우 낮았음. 이는 교육 외적 요소보다 내적 요소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냄.

〈표 5-6〉 문화예술교육에서 보완 사항

보완사항	비율(%)
수강비용이 저렴해야 한다.	16.7
내용이 알차야 한다.	25.7
강사들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13.9
체험과 실기 위주가 되어야 한다.	19.4
교육받는 인원이 보다 적어야 한다.	4.9
교육시설과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6.9
프로그램이 다양해야 한다.	11.1
기타	1.4

*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 교육 수강 경험이 있는 사람에 한함.

자료: 광주문화재단(2016). 『광주문화지표조사 결과보고서』, 204쪽.

□ 광주의 참여인원은 30명 미만이 68.9%로 높으나 광역시 평균(70.6%)보다 낮음.

- 광역시 중 30명 미만의 비율은 대구 58.9%, 대전 62.1% 다음으로 광주로 낮은 비율을 보임.
- 다른 인원의 경우도 비율은 전체적으로 비슷하나 50~100명 인원은 2.8%로 광역시 평균(4.7%)과 전체평균(4.4%)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의 특성상 30명 미만이 많을 수밖에 없으나 참여인원의 비율이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는 어려움.

□ 앞서 수강인원에 관한 보완사항도 아주 낮은 비율이었기에 참여인원에 대한 분포는 적절한 것으로 파악됨.

〈표 5-7〉 광주 문화예술교육 운영계획상 참여계획 인원 현황

(단위: %,명)

	사례수	30명 미만	30명 ~50명	50명 ~100명	100명 초과	무응답	누적인원
전체	(4,008)	70.4	16.4	5.9	4.4	2.9	186,391.0
광역시	(1,821)	70.6	16.4	6.5	4.7	1.9	92,274.0
광주	(212)	68.9	14.2	2.8	4.2	9.9	9,011.0
서울	(541)	68.8	14.6	8.9	7.4	0.4	38,718.0
부산	(248)	81.9	10.5	3.6	3.2	0.8	11,383.0
대구	(168)	58.9	19.6	11.9	8.3	1.2	12,498.0
인천	(201)	72.6	18.4	5.0	1.0	3.0	5,222.0
대전	(243)	62.1	26.7	7.8	3.3	0.0	8,392.0
울산	(159)	84.9	10.7	1.9	1.9	0.6	5,739.0
세종	(49)	69.4	22.4	6.1	2.0	0.0	1,311.0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7). 『2017지역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연구』

□ 문화예술교육 수강시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서 ‘좀처럼 시간이 나지 않는다’가 31.6%로 가장 높음.

- 다음으로 ‘관련정보가 부족하다’(22.3%), ‘비용이 많이 든다’(15.3%), ‘관심 있는 강좌가 없다’(15.0%), ‘주변에 시설이 없다.’(6.5%) 순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의 확산을 위해서 문화가 있는 날 등을 활용한 시간의 충분한 확보와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정보 전달 체계 확립 등에 힘써야 함.

- 의외로 접근성에 관한 질문은 응답률이 낮았음.
 - 주변에 시설이 없다, 시설이 불편하다, 교통이 불편하다 등은 인프라와 관련된 것으로 문화예술교육 수강 시 인프라와 관련된 요소는 큰 고려요인이 되지 않음.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 강화에 힘써야 함.

〈표 5-8〉 문화예술교육 수강 시 어려움

어려운 이유	비율(%)
비용이 많이 든다.	15.3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는다.	31.6
관심 있는 강좌가 없다.	15.0
교통이 불편하다.	2.2
시설이 불편하다.	3.5
관련정보가 부족하다.	22.3
함께 배울 사람이 없다.	1.9
주변에 시설이 없다.	6.5
기타	1.6

*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 교육 수강 경험이 있는 사람에 한함.

자료: 광주문화재단(2016). 『광주문화지표조사 결과보고서』, 204쪽.

3. 문화예술교육 단체 현황

□ 광주시의 운영단체는 특광역시 중 많은 수준

-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운영단체를 모두 합치면 125개로 이는 서울 266개 다음으로 많은 수준임.
- 인구가 광주보다 많은 부산과 대구의 경우 각각 107개, 89개로 광주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어느 해가 특히 많지 않고 2015년 41개, 2016년 36개, 2017년 48개로 평균 40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다만, 운영단체가 많다는 것만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여건이 좋다고 단정할 수 없음.

〈표 5-9〉 광주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 현황

(단위: 개)

구분	전체	2015				2016				2017			
		토요 지역	토요 기획	지역 특성화	부처간 협력	토요 지역	토요 기획	지역 특성화	부처간 협력	토요 지역	토요 기획	지역 특성화	부처간 협력
전체	2,053	177	52	205	152	375	64	150	127	415	15	186	135
광주	125	17	3	12	9	21	4	10	1	27	0	11	10
서울	266	14	7	12	59	37	2	11	35	35	8	12	34
부산	107	14	2	7	8	24	7	3	5	25	0	8	4
대구	89	0	2	4	10	0	0	6	10	36	1	8	12
인천	108	7	4	10	8	19	4	2	8	24	2	12	8
대전	110	8	0	9	3	26	5	4	6	31	0	10	8
울산	72	11	0	11	0	15	3	10	1	14	0	6	1
세종	26	3	1	2	0	4	2	1	1	7	0	3	2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7). 『2017지역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연구』

□ 광주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역시 특광역시 중 많은 수준

-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프로그램 수는 233개로 서울(540개), 부산(249개), 대전(239개) 다음으로 많음.
- 운영단체에 비해 프로그램 수가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결과가 나옴. 하지만 프로그램 수 자체가 질적 수준을 좌우하는 것은 아님.
- 2015년 68개, 2016년 84개, 2017년 81개로 프로그램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전반적으로 토요일기획학교 프로그램 수가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 2017년에 가장 많았던 곳은 서울로 11곳이나 부산, 대전, 울산, 세종 등은 0곳으로 진행을 하지도 못했음. 이러한 현상은 2016년에도 유사하여 부산 18곳, 대구 0곳으로 차이가 매우 크고, 2015년도 서울 10곳, 대전과 울산 각 1곳임.
- 사업별로 차이는 당연하나 너무 심한 경우는 지역별 균형을 고려 필요

〈표 5-10〉 광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단위: 개)

구분	전체	2015				2016				2017			
		토요 지역	토요 기획	지역 특성화	부처간 협력	토요 지역	토요 기획	지역 특성화	부처간 협력	토요 지역	토요 기획	지역 특성화	부처간 협력
전체	4,008	343	88	339	363	566	116	338	400	698	29	349	379
광주	233	26	3	19	20	32	8	22	22	36	1	20	24
서울	540	30	10	19	109	56	8	23	94	61	11	21	98
부산	249	27	2	16	18	39	18	17	21	58	0	17	16
대구	167	0	4	9	27	0	0	10	31	40	1	10	35
인천	200	12	6	18	21	28	6	15	21	37	3	17	16
대전	239	19	1	20	16	38	7	22	23	46	0	23	24
울산	158	18	1	18	4	30	6	19	5	36	0	17	4
세종	53	5	2	4	3	7	2	4	4	11	0	5	6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7). 『2017지역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연구』

□ 광주시 문화예술교육단체의 교육활동 권역은 협소한 수준

- 광주시의 문화예술교육단체가 어디까지 커버하는 지를 검토한 결과 91%가 광주 시에서만 수행하고, 11.4%가 전남지역까지 커버하며 전국지역까지 커버하는 단체는 0.0%로 나타났다.
- 전국지역까지 커버하는 경우는 부산이 1.9%, 대구가 3.3%, 대전이 6.3%까지 나타났을 뿐 아니라 광역시 전체 평균이 6.1%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을 요함.
- 교육활동 권역이 의미하는 바는 운영단체의 규모와 자체 경쟁력임. 즉, 전국 지역까지 커버하려면 일반적인 수준의 예술강사 수급으로는 어렵고, 더 많은 강사 풀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타 지역에 진출할 정도로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광주시 문화예술교육운영단체는 이러한 점에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 광주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 교육활동 권역 현황

(단위: %)

	사례수	운영단체 소재 시/도 내에서만 수행	운영단체 소재 인근 시/도 지역까지 커버	전국 지역까지 커버	무응답
전체	(2,053)	88.9	6.9	3.7	0.4
광역시	(903)	82.2	11.4	6.1	0.3
광주	(122)	91.0	7.4	0.0	1.6
서울	(267)	65.5	19.1	15.4	0.0
부산	(108)	88.9	9.3	1.9	0.0
대구	(90)	83.3	13.3	3.3	0.0
인천	(108)	89.8	8.3	0.9	0.9
대전	(111)	84.7	9.0	6.3	0.0
울산	(72)	98.6	1.4	0.0	0.0
세종	(25)	92.0	4.0	4.0	0.0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7). 『2017지역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연구』 재구성

□ 광주시 문화예술교육단체 중 1회 수행한 단체가 52.5%를 차지

- 광주시 뿐만 아니라 1회만 수행한 단체의 비율은 광역시 평균 54.7%이며 전체 평균 55.8%에 달함. 이는 전국적인 문제로 파악되며 이는 곧 문화예술교육이 안정화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하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문화예술강사들이 최소한의 인건비 보존을 위해 추가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고 강의시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덧붙여져 1회 수행횟수가 높아졌을 수도 있음. 이러한 경우는 문화예술교육이 불안정한 상태로 진행될 것이라 보기는 어려움.
- 이와 관련하여 광주시에서 협동조합 형태의 문화예술교육단체가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3회 수행한 단체가 13.1%로 대전(14.4%) 다음으로 높았으나 4회는 5.7%로 광역시 중 가장 낮게 나타남.

〈표 5-12〉 광주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수행횟수 현황

(단위: %,회)

	사례수	1회	2회	3회	4회	평균(회)
전체	(2,053)	55.8	21.0	12.0	11.3	2.0
광역시	(903)	54.7	20.9	10.7	13.6	2.1
광주	(122)	52.5	28.7	13.1	5.7	1.0
서울	(267)	56.9	18.7	9.4	15.0	2.0
부산	(108)	45.4	21.3	12.0	21.3	2.3
대구	(90)	66.7	12.2	5.6	15.6	1.9
인천	(108)	60.2	20.4	10.2	9.3	1.8
대전	(111)	53.2	19.8	14.4	12.6	2.2
울산	(72)	44.4	25.0	12.5	18.1	2.2
세종	(25)	52.0	32.0	8.0	8.0	2.1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7). 『2017지역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연구』재구성

□ 광주시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설립년도는 2010년~2014년이 32.8%로 최다

- 2009년 이전에도 27.0%가 설립되었으며 2015년 이후에는 8.2%로 낮은 비율을 보임.
-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2009년 이전이 32.3%로 가장 많았고, 2010년~2014년이 28.3%, 2015년 이후에는 11.0% 순으로 나타남.
- 설립 역사만 보았을 때 4년 이상 된 업체가 59.9%를 차지하여 광주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의 역사가 짧은 편만은 아님.
- 다만, 단체 자체에 연구개발 인력이 충분하고 강사의 지속근무년수가 함께 비례하는 관계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이들의 조건이 함께 충족된다면 광주시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지속가능성과 잠재력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표 5-13〉 광주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 설립년도 현황

(단위: %)

	사례수	2009년 이전	2010년 ~2014년	2015년 이후	무응답
전체	(2,053)	32.3	28.3	11.0	28.4
광역시	(903)	27.5	27.4	10.2	35.0
광주	(122)	27.0	32.8	8.2	32.0
서울	(267)	15.7	21.0	7.5	55.8
부산	(108)	38.0	32.4	15.7	13.9
대구	(90)	25.6	20.0	10.0	44.4
인천	(108)	25.9	18.5	11.1	44.4
대전	(111)	40.5	34.2	9.9	15.3
울산	(72)	38.9	44.4	12.5	4.2
세종	(25)	32.0	32.0	16.0	20.0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7). 『2017지역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연구』재구성

□ 광주시 문화예술교육단체는 5인~9인 사이가 27.9%로 가장 많음.

- 광역시의 경우 10인 이상이 26.2%로 가장 높고, 전체 평균으로는 5인~9인 사이가 28.3%로 가장 높음.
- 광주시도 10인 이상 단체가 25.4%를 차지하여 그렇게 많은 차이를 드러내지 않음.
- 다만, 무응답 비율이 32.0%로 높아 이들의 비율을 알 수 있어야 종사자 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음.

□ 4인 이하가 14.8%로 낮게 나타났지만 이는 광역시 평균(11.3%)보다 높고, 전체 평균(15.8%)보다 약간 낮음.

- 4인 이하의 경우 행정인력과 기획인력 없이 대부분 문화예술강사로 이루어진 조직임. 이들의 교과 연구 개발 능력과 지속적인 교수 능력 보완을 위해 노력필요.

〈표 5-14〉 광주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 종사자 수 현황

(단위: %, 명)

	사례수	4인 이하	5인~9인	10인 이상	무응답	평균
전체	(2,053)	15.8	28.3	27.5	28.5	11.8
광역시	(903)	11.3	25.7	26.2	36.8	13.2
광주	(122)	14.8	27.9	25.4	32.0	11.4
서울	(267)	5.2	21.0	19.9	53.9	16.7
부산	(108)	14.8	32.4	37.0	15.7	11.5
대구	(90)	3.3	10.0	27.8	58.9	22.1
인천	(108)	11.1	21.3	21.3	46.3	10.8
대전	(111)	15.3	35.1	31.5	18.0	13.5
울산	(72)	20.8	38.9	34.7	5.6	9.7
세종	(25)	28.0	32.0	20.0	20.0	8.1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7). 『2017지역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연구』 재구성

□ 광주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인력은 4.86명으로 광역시 평균 5.20명보다 낮음.

- 기획자도 광주시가 0.75명임에 비해 광역시 평균 0.80명으로 낮은 수준임.
 - 기획자는 교육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기획하는 연구개발인력으로 프로그램의 질을 담보하고 장기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인력임.
 - 이들이 프로그램 당 1명이 안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수준이고 비교적 인적 자원이 풍부한 광역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임.
- 행정담당은 0.03명으로 광역시 중 울산광역시와 공동 최하위에 위치하였음. 이는 사업의 정산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행정쪽으로 취약하다는 뜻임.

〈표 5-15〉 광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인력 구성 현황

(단위: 명, 평균)

	사례수	총계	기획자	강사				운영 및 기타 인력					
				주강사	보조강사	특강강사	초빙강사	담당자	행정담당	총괄운영	감독	코디네이션	레크레이션
전체	(4,008)	4.85	0.75	2.08	1.45	0.25	0.02	0.12	0.05	0.07	0.02	0.04	0.00
광역시	(1,821)	5.20	0.80	2.26	1.57	0.26	0.02	0.10	0.06	0.07	0.02	0.04	0.00
광주	(212)	4.86	0.75	2.04	1.58	0.16	0.02	0.14	0.03	0.08	0.01	0.05	0.00
서울	(541)	5.62	0.83	2.60	1.54	0.35	0.03	0.05	0.07	0.08	0.03	0.04	0.00
부산	(248)	4.87	0.80	2.15	1.50	0.23	0.01	0.09	0.04	0.03	0.00	0.02	0.00
대구	(168)	6.43	0.81	2.70	1.92	0.36	0.05	0.08	0.15	0.21	0.04	0.10	0.01
인천	(201)	4.29	0.75	1.73	1.39	0.21	0.01	0.11	0.03	0.05	0.00	0.01	0.00
대전	(243)	5.32	0.83	2.14	1.87	0.20	0.01	0.13	0.08	0.02	0.02	0.02	0.00
울산	(159)	4.86	0.78	2.23	1.31	0.25	0.01	0.15	0.04	0.03	0.00	0.06	0.00
세종	(49)	3.63	0.80	1.55	1.00	0.16	0.02	0.10	0.00	0.00	0.00	0.00	0.00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7). 『2017지역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연구』재구성

4. 광주시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현황

□ 광주시 문화기반시설별 문화예술교육 담당 평균 직원 수를 살펴보면 평균 직원 수는 3.0명으로 전체 3.2명에 비해 낮음.

- 광주의 경우 기초문화재단이 없어 담당 평균 직원 수는 0명임. 그에 반해 대구는 9.5명으로 높았으며, 전체 평균 4.1명과도 많은 차이를 보임.
- 문화원의 경우 담당자 수는 광주가 1.0명으로 전체 2.9명에 못미치고 있으며, 광역시 중에서도 최하위에 위치함.
- 문화의집은 광주시가 2.5명으로 특광역시 중 가장 많으나 전국 평균인 3.4명에 미치지 못함.

〈표 5-16〉 문화기반시설별 문화예술교육 담당 평균 직원 수

(단위: 명)

구분	문화기반시설별 문화예술교육 담당 평균 직원 수	기초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담당 평균직원 수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평균 담당자 수	지방문화원 문화예술교육 평균 담당자 수	문화의집 문화예술교육 평균 담당자 수
전체	3.2	4.1	3.2	2.9	3.4
서울	3.6	3.5	7.4	2.5	0.0
부산	2.2	1.0	3.2	1.3	0.0
대구	3.9	9.5	1.3	2.0	0.0
인천	3.7	1.0	1.0	4.8	2.0
광주	3.0	0.0	4.5	1.0	2.5
대전	1.7	0.0	1.5	1.6	2.0
울산	3.5	0.0	3.0	5.7	1.0
세종	0.0	0.0	0.0	0.0	0.0
경기	3.7	6.4	1.5	3.1	2.7
강원	3.5	2.0	1.3	3.2	12.0
충북	2.5	0.0	3.0	2.0	2.8
충남	3.5	2.7	5.0	3.0	7.0
전북	3.6	2.5	2.8	3.3	5.2
전남	2.6	2.0	2.8	2.4	3.3
경북	3.6	3.5	3.5	3.9	1.5
경남	2.4	3.5	3.2	1.9	1.0
제주	2.7	0.0	2.0	4.0	2.0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7). 『2017지역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연구』재구성

□ 문화기반시설별 전업 직원 수를 살펴보면 광주시는 1.4명으로 전체 평균 1.6명을 약간 하회하고 있음.

- 문예회관의 경우 전업 담당자가 2.0명인데 비해 전국이 1.6명이며, 광역시 중에 가장 많은 수가 전업으로 담당하고 있음.
- 문화원은 0.5명으로 전국 평균 1.4명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 대구, 인천, 울산 등에 비해 낮아 특광역시 중 하위권에 위치함.
- 문화의집은 1.3명으로 전체 1.7명에 미치지 못하지만 특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수치임.
- 문화기반시설별로 문화예술교육 담당 평균 전업 직원 수를 살펴보면 문예회관은 양호한 편이나 문화의집과 지방문화원은 열악한 상황임.

〈표 5-17〉 문화기반시설별 문화예술교육 담당 평균 전업 직원 수

(단위: 명)

구분	문화기반시설 평균 전업 담당자 수	기초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평균 전업 담당자 수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평균 전업 담당자 수	지방문화원 문화예술교육 평균 전업 담당자 수	문화의집 문화예술교육 평균 전업 담당자 수
전체	1.6	2.3	1.6	1.4	1.7
서울	1.9	1.8	4.6	1.1	0.0
부산	0.9	0.0	1.6	0.3	0.0
대구	1.3	2.5	0.3	1.5	0.0
인천	2.6	1.0	0.0	3.5	1.0
광주	1.4	0.0	2.0	0.5	1.3
대전	0.6	0.0	1.5	0.0	1.0
울산	1.3	0.0	1.0	2.3	0.0
세종	0.0	0.0	0.0	0.0	0.0
경기	2.3	4.0	0.8	1.6	2.3
강원	1.1	0.8	0.0	1.6	1.0
충북	0.8	0.0	0.5	0.8	1.0
충남	2.3	2.3	4.5	1.7	3.0
전북	1.7	1.5	1.2	1.2	3.2
전남	0.9	0.0	1.6	0.5	2.0
경북	1.9	3.0	1.0	1.9	1.5
경남	1.5	1.8	2.0	1.3	1.0
제주	2.0	0.0	1.0	4.0	1.0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7). 『2017지역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연구』재구성

□ 문화기반시설 예산을 살펴보면 총예산 대비 문화예술교육 자체예산의 비율이 31.5%로 특광역시 중 최저이며, 전체 평균 33.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2017년 사업비 총예산을 살펴보면 7억3천만원인데다 평균예산은 8천1백만원으로 매우 적음. 이는 특광역시 중에서 세종시를 제외하고 최하위에 속함.
- 문화예술교육 관련예산만 보더라도 광주시 총예산은 620백만원이며, 이를 시설별로 평균을 내보면 6천8백만원으로 특광역시 중 가장 적음.
- 문화예술교육 예산 중 시설 자체예산을 보면 195백만원, 평균으로는 21백만원으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전체 평균이 79백만원임을 감안할 때 매우 낮은 수치임.

〈표 5-18〉 문화기반시설의 예산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년 사업비 총 예산		문화예술교육 총 예산		문화예술교육 자체예산		총예산 대비 자체예산 비율
	총예산	평균	총예산	평균	총예산	평균	
전체	382,654.3	1,412.0	62,377.4	235.4	20,931.2	79.0	33.6
서울	50,474.5	2,019.0	12,373.4	426.7	6,798.9	234.4	54.9
부산	3,631.0	453.9	1,039.6	115.5	369.7	41.1	35.6
대구	6,321.0	790.1	907.0	129.6	645.0	92.1	71.1
인천	2,866.0	318.4	862.0	95.8	413.7	46.0	48.0
광주	730.5	81.2	620.5	68.9	195.2	21.7	31.5
대전	2,245.0	249.4	954.0	119.3	467.0	58.4	49.0
울산	1,483.5	185.4	1,053.5	150.5	782.5	111.8	74.3
세종	209.0	209.0	-	-	-	-	-
경기	171,678.0	4,087.6	7,169.2	183.8	3,614.0	92.7	50.4
강원	43,470.0	2,070.0	8,827.5	420.4	597.5	28.5	6.8
충북	4,030.2	366.4	3,828.8	319.1	2,056.8	171.4	53.7
충남	14,998.8	882.3	2,331.8	145.7	1,137.0	71.1	48.8
전북	15,701.8	682.7	9,192.6	383.0	1,245.3	51.9	13.5
전남	10,834.4	433.4	3,450.4	143.8	703.0	29.3	20.4
경북	25,649.7	916.1	5,191.3	199.7	608.3	23.4	11.7
경남	27,039.9	1,081.6	3,256.8	148.0	1,227.3	55.8	37.7
제주	1,291.0	645.5	1,319.0	439.7	70.0	23.3	5.3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7). 『2017지역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연구』재구성

□ 문화기반시설의 상설문화강좌를 살펴보면 광주시는 시설별 평균 37.5개로 대구, 부산, 울산 다음을 차지하였음.

- 상설 문화강좌 프로그램 총수는 광주가 225개로 부산 321개, 대구 264개, 울산 236개 다음으로 많음.
- 상설 문화강좌 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를 살펴보면 평균 18.5개이며 상설 문화강좌 대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비율이 49.3%로 낮은 편에 속함. 전체 평균 프로그램 수는 27.3개이며 비율은 76.7%임.
- 부산은 평균 52.7개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비율이 98.1%로 매우 높게 나타남. 대구(평균 39.7/비율 45.1%), 울산(39.4/83.5%), 대전(26.5/97.2%) 등도 광주보다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

〈표 5-19〉 문화기반시설의 상설문화강좌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단위: 개, %)

구분	상설 문화강좌 프로그램 수		상설 문화강좌 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		상설문화강좌 대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비율
	총	평균	총	평균	
전체	5,583	34.5	4,284	27.3	76.7
서울	1,439	72.0	980	49.0	68.1
부산	321	53.5	315	52.5	98.1
대구	264	88.0	119	39.7	45.1
인천	133	26.6	40	8.0	30.1
광주	225	37.5	111	18.5	49.3
대전	109	36.3	106	26.5	97.2
울산	236	47.2	197	39.4	83.5
세종	25	25.0	14	14.0	56.0
경기	1,628	65.1	1,577	63.1	96.9
강원	186	18.6	117	11.7	62.9
충북	102	12.8	50	7.1	49.0
충남	201	15.5	169	13.0	84.1
전북	193	13.8	119	9.2	61.7
전남	57	5.7	46	4.6	80.7
경북	242	16.1	131	10.9	54.1
경남	202	12.6	175	11.7	86.6
제주	20	10.0	18	9.0	90.0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7). 『2017지역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연구』재구성

□ 문화기반시설이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할 때 어려움점으로 예산 확보를 64.7%(광주 80.0%)로 가장 많이 꼽았음.

- 전문인력 부족이 41.6%, 재단 내 인프라 부족이 31.9% 등으로 나타남.
- 광주 역시 다른 지역과 비슷하나 예산 확보 문제가 매우 높았고, 재단 내 인프라 부족이 60.0%, 전문인력 부족이 40.0%로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특성상 문화기반시설에서 예산 확보가 어려워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어려움. 문화기반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을 안한다고 볼 수 있음.

〈표 5-20〉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실행 시 어려운 점

(단위: %)

구분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지역주민 수요 미흡	예산, 재정 확보	재단의 전문, 전담 인력 부족	재단 책임자 또는 관계자의 마인드 부족	재단 내 설비, 장비, 공간 등 인프라 부족	교육사업 기획 및 수행능력 부족_재단 내	교육사업 참여자 저조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미비	지자체의 인식부족
전체	29.2	64.7	41.6	7.3	31.9	5.8	21.0	11.9	17.3
서울	18.8	65.6	46.9	9.4	62.5	3.1	12.5	15.6	9.4
부산	45.5	54.5	27.3	-	45.5	-	36.4	-	9.1
대구	37.5	75.0	37.5	25.0	50.0	12.5	12.5	-	12.5
인천	18.2	63.6	36.4	9.1	27.3	-	18.2	18.2	45.5
광주	30.0	80.0	40.0	10.0	60.0	10.0	20.0	30.0	10.0
대전	22.2	77.8	33.3	11.1	22.2	-	22.2	-	22.2
울산	70.0	50.0	40.0	-	10.0	-	40.0	10.0	10.0
세종	50.0	50.0	-	-	50.0	-	-	-	-
경기	24.4	66.7	48.9	11.1	28.9	6.7	15.6	20.0	24.4
강원	18.5	55.6	40.7	-	29.6	7.4	11.1	11.1	11.1
충북	18.8	62.5	50.0	-	31.3	6.3	12.5	-	12.5
충남	21.7	52.2	21.7	13.0	17.4	4.3	13.0	13.0	17.4
전북	37.9	65.5	48.3	6.9	27.6	10.3	24.1	3.4	13.8
전남	33.3	81.5	44.4	11.1	25.9	3.7	22.2	14.8	37.0
경북	36.4	72.7	42.4	3.0	33.3	6.1	27.3	15.2	12.1
경남	34.4	56.3	40.6	6.3	18.8	9.4	31.3	9.4	12.5
제주	-	50.0	50.0	-	25.0	-	75.0	-	25.0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7). 『2017지역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연구』재구성

□ 운영단체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을 분류해 보면 초등생이 66.1%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이 32.4%, 주민대상통합이 28.8%로 다음을 차지하였음.

- 광주시 초등학생이 39.6%, 중학생이 33.3% 등으로 나타났으나 가족이 31.3%로 전체 평균 25.6%에 비해 높게 나왔음.
- 하지만 고등학생의 비율이 10.4%밖에 되지 않아 전체 평균인 20.0%의 절반에 그치고 있으며, 인천(34.8%), 울산(33.3%), 부산(26.3%) 등과 차이를 보임.

〈표 5-21〉 운영단체 프로그램 수혜대상

(단위: 개, %)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가족	일반주민	군부대	주민대상통합
전체	66.1	32.4	20.0	25.6	0.1	16.4	28.8
서울	45.5	29.6	19.3	12.5	0.0	43.2	18.2
부산	100.0	52.6	26.3	39.5	0.0	13.2	36.8
대구	40.4	28.1	22.8	31.6	0.0	15.8	10.5
인천	43.5	28.3	34.8	10.9	0.0	10.9	21.7
광주	39.6	33.3	10.4	31.3	0.0	6.3	22.9
대전	63.3	20.4	16.3	28.6	0.0	16.3	28.5
울산	100.0	61.9	33.3	23.8	0.0	4.8	57.1
세종	50.0	8.3	16.7	50.0	0.0	25.0	33.3
경기	51.5	31.8	15.2	13.6	1.5	27.3	31.8
강원	79.6	36.4	15.9	43.2	0.0	20.5	22.7
충북	63.6	18.2	21.2	30.3	0.0	12.1	24.2
충남	69.2	48.7	33.3	28.2	0.0	7.7	38.5
전북	56.0	48.0	36.0	20.0	0.0	10.0	36.0
전남	66.7	25.0	10.4	39.6	0.0	4.2	31.3
경북	100.0	32.3	9.7	12.9	0.0	9.7	38.7
경남	91.9	30.7	14.5	27.4	0.0	9.7	37.1
제주	89.5	5.3	0.0	21.1	0.0	5.3	36.8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7). 『2017지역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연구』재구성

□ 문화기반시설이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할 때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싶은 기관으로 문화기반시설과 교육시설을 꼽았지만 광주는 광역문화재단을 40.0%로 꼽았음.

- 울산(20.0%)을 제외하고 특광역시에서 광역문화재단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싶은 문화기반시설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 또한 광역도에도 40.0%는 없을 정도로 광주의 경우 문화재단과 연계할 뜻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의외로 광주는 학교 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도가 10.0%로 낮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여러 시설에 고른 분포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판단됨.

〈표 5-22〉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행 시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싶은 기관

(단위: %)

구분	해당지역 광역문화 재단	문화기반 시설	지역생활 시설	문화예술 단체	문화 예술인	학교_ 초중고_ 대학교	유관 공공기관
전체	9.4	15.2	10.6	10.6	8.2	13.4	17.3
서울	6.3	18.8	9.4	18.8	9.4	12.5	12.5
부산	-	9.1	36.4	9.1	-	18.2	27.3
대구	-	-	12.5	-	12.5	37.5	12.5
인천	9.1	18.2	9.1	-	-	18.2	18.2
광주	40.0	20.0	20.0	20.0	20.0	10.0	10.0
대전	-	33.3	22.2	11.1	22.2	-	22.2
울산	20.0	20.0	-	30.0	10.0	10.0	10.0
세종	-	-	-	-	-	-	50.0
경기	8.9	13.3	6.7	8.9	6.7	13.3	24.4
강원	7.4	18.5	18.5	11.1	14.8	7.4	11.1
충북	-	12.5	6.3	12.5	-	6.3	25.0
충남	13.0	8.7	8.7	8.7	-	13.0	21.7
전북	20.7	17.2	6.9	10.3	13.8	13.8	10.3
전남	14.8	7.4	11.1	7.4	-	11.1	11.1
경북	-	24.2	9.1	9.1	9.1	21.2	21.2
경남	6.3	9.4	9.4	9.4	12.5	15.6	18.8
제주	25.0	25.0	-	-	-	-	-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7). 『2017지역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연구』 재구성

5. 광주시 문화예술교육 현황 분석 시사점

□ 문화예술교육 시설의 균형 배분 필요

- 문화예술교육 학습 공간이 동구와 북구에 비해 서구와 광산구는 부족한 실정임. 광역시임을 고려할 때 학습 공간의 무조건적 균형 배분은 의미가 없지만 최소한의 학습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광산구와 서구는 도심형보다는 농촌형 마을에 문화예술교육 학습 공간이 필요함.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행정인력 양성 필요

- 문화예술교육사는 많이 보유하고 있는 편이나 기획인력과 행정인력이 많이 부족한 편임.
- 기획인력과 행정인력은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인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양성 계획 필요
- 기획인력 양성을 통해 광주시에서 잘 안되어 왔던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개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세부적인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교육의 행정인력은 별도의 전문역량을 갖추어야 할 정도는 아님. 행정 서류 작성과 처리, 그리고 예산에 대한 정산 능력만 있으면 됨. 문제는 이러한 능력을 갖춘 인력이 문화예술교육단체에 없다보니 정산과 행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광역지원센터의 과부하로 연결됨. 따라서 행정담당 인력에 대한 사업전, 사업중, 사업 후 워크숍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광주 공공기관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 다른 지역에 비해 공공기관의 문화예술교육 실행률이 떨어짐.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의 문화예술교육 실행률은 높지만, 문화원의 문화예술교육은 '0'에 가까움.

- 모든 공공기관이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없지만, 기초적인 기관들은 문화예술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음. 특히 문화원의 경우 문화유산과 관련된 내부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문화예술교육과 접목시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수강생들에게 정체성 확립과 문화유산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을 제고할 수 있음.
-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인 광주문화재단이 앞장서서 공공기관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야 함.

□ 교육주체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 필요

-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의 확대와 다양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교육 주체인 예술강사들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는 의무연수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역량강화를 강사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것이 아닌지 회의가 있음.
- 강사 선발에 있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에 가산점이 부여되고 있음. 예술강사 관련 교육 과정으로 유일하기 때문에 충분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강화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임.
- 광주시에서도 나름대로 강사 워크숍을 개최하거나 인큐베이팅 교육을 진행하기도 함. 하지만 체계적인 양성 시스템이라 할 수 없음. 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필요

□ 지역 선도형 사업 개발 필요

- 광주시는 문화예술교육을 선도하는 광역시로 지금까지 많은 사례를 개발하여 왔음.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경자씨와 재봉틀’과 같은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2018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에서도 중점을 두고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생애전환기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광주 특화

형 사업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생애주기별은 특정 연령기에 맞춘 정적 사업이지만 생애전환기는 삶의 특수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를 대비한 동적 사업임. 대학생에서 취업준비로 전환되었을 때, 직장을 다니다가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었을 때,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할 때 등, 인생의 전환기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시기임. 따라서 이 시기를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은 심리적 안정감과 자존감을 높이고 나아가 인생에 대해 다시 설계하는 목적이 있음.

- ‘생애전환기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선도형 사업으로 개발한다면 향후 문화예술교육 관련 국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며, 다시 한 번 광주문화예술교육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임.

□ 지역 특화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 광주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는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문화콘텐츠’를 주력산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도시임.
- 이에 걸맞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문화예술교육 역량도 높이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임.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문화예술교육 ODA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아시아 각국에서 필요로 하는 ODA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광주에서 개발하여 ODA사업을 수행하면, ODA사업에 대한 노하우도 집적할 수 있고, 아시아에 대한 문화적 정보를 광주가 수집할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될 것임.
- ‘문화콘텐츠’와 관련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즉, ‘문화콘텐츠 이해와 감상’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중고 학교에 보급하고 사회인들에게도 보급한다면 광주시 전반에 걸쳐 ‘문화콘텐츠’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고 문화산업으로서 ‘문화콘텐츠’가 아닌 일상에서 보고 즐기는 ‘문화콘텐츠’를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임.

□ 광주시민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요 조사 필요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요와 욕구 파악을 위한 기본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음. 시민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개별화된 욕구를 만족시키고 사업실행의 명확한 방향 설정을 위한 기본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수요조사에 대한 범위 설정에 한계가 있다면 단위 사업별 수요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함.

□ 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 필요

- 현재 학교문화예술교육 중 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광주문화재단이 아닌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운영단체의 역량은 차치하고 운영과정이 불투명하여 새로 진입하는 문화예술교육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선발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함. 선발 시험에 대한 기출문제나 예시문제 정도는 공개하고 선발 기준과 배점도 함께 공개해야 함. 탈락한 예술강사 지망생에게는 탈락한 사유를 전달하여 차기 도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함.
- 문화예술강사들의 개인별 시수 차이도 분명 존재함. 476시간이 1인당 최대 시수지만 0시수인 문화예술강사도 존재함. 처음부터 매칭에 대한 원칙과 세부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그에 의거한 시수 매칭이 되어야 함. 만약 시수매칭이 평균에 비해 떨어진다면 합리적이고 이해 가능한 사유를 공개하고 객관적인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함. 불투명한 운영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오해의 누적은 불신으로 전이될 수 있음.

□ 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시스템 측면을 적극 관여 필요

- 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이 광역센터의 업무영역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며, 여전히 공공의 영역에 있음.
- 민간 위탁으로 넘어간 이상 민간단체에서 시수를 채우는 데만 급급하여 문화에

술교육의 질을 제고하기까지 버거운 면이 있음.

- 일례로 학교 시설이 문화예술교육에 최적의 공간은 아님. 시설 자체가 최적도 아니지만 운영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음. 무용교육을 하고 있는 실내 공간에서 첼로 교육을 한다든가 심지어 체육교육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음.
- 또한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교보재는 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에서 지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몇몇 열의있는 문화예술강사는 개인이 비용을 마련하여 준비하고 있음.
- 예산이 적은 부분은 별도로 마련하거나 교육청과 협의하면 가능한 부분임. 세심한 배려 하나하나가 1차적으로는 문화예술강사의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교육을 불러오고 2차적으로는 교육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아짐.

□ 학교 일선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 학교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학교 학예회 용역으로 생각하는 담당자들이 심심치 않게 있음. 물론 다수의 학교에서 학예회 기획을 위한 별도의 공모를 거치기도 하고 선생님의 역량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학예회를 노골적으로 부탁하고 있는 학교 운영진과 선생님들 역시 여전히 존재함.
- 이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금지’를 알리고 학교 담당자들에게 별도의 교육을 통해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폐단임.
- 결과적으로는 문화예술강사의 의욕 상실에 불과하지만 기저에는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임.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를 위시하여 지역에 문화예술교육을 공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문화=무료)을 확산시킬 뿐임.
- 성남의 경우 문화예술강사에게 학교에서 시간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이는 10만원이라는 금액의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 전환, 문화예술강사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교육 태도 유발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문화예술교육이 문화예술에 대한 소비도 활성화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그랬을 때 문화예술 생태계가 살아나고 역으로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도 살아남.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형태의 무료 공급, 철학의 부재, 학예회 용역 대행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VI

광주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향

VI. 광주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향

1. 광주시 문화예술교육 기본 철학 수립

□ 시민 기본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 철학 필요

-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광주시는 광역문화예술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여 왔고, 광역문화예술교육센터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내려준 예산을 집행하는 역할이 대부분이어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공급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음.
- 장기적 측면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접근해야 하고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접근하여 광주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려면 정책 철학부터 다시 고민해야 하는 상황임.
- 시민 기본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접근하게 되면 교육대상과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 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함.
 - 학교문화예술교육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여 인구 비례로 보았을 때 문화예술교육이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함.
 -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특정 장르 중심이 되기보다 다양한 장르로 분산되도록 프로그램을 공급해야 함. 또한 생애주기 역시 경력단절, 은퇴시기 등 특정 생애주기에 집중한 공급이 아니라 유아시기부터 노년까지 고르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함.
 - 교육 인프라 역시 전지역, 전세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촘촘한 네트워킹 작업이 실시되어야 함.
- 백선휘(2017)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권리를 언급하면서 ‘문화예술교육과 활동의 활성화를 요구하고 이에 기여할 권리, 문화예술교육 공간을 수시로 이용하고 그 운영에 참여할 권리, 필요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스스로 운영할 권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권리’ 등으로 세분화하였음.

□ 지역 스스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 현재의 문화예술교육이 학교를 중심으로 진해되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 공급의 용이성 때문이다. 학교에서 강사지원을 신청하면 강사를 보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집객이나 프로그램 장소 섭외 등의 번거로움이 없음.
- 다시 말하자면 집객과 장소 등의 공급 시스템이 없다면 현재의 문화예술교육도 자생력을 갖추고 진행하기 어려움.
- 이는 지역에서 스스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함.
-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는 광주시의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함.
- 즉, 문체부의 사업을 수행하는 현상황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자원을 조사하고 이를 연계하여 인프라-프로그램-시민이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아울러 유관기관(박물관, 도서관, 문화원 등) 및 연계기관(교육청, 평생교육진흥원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문화예술교육 총역량을 제고하고 효과 역시 지역사회로 수렴되어야 함.

□ 광역문화예술교육센터의 역할 및 위상 리모델링

- 전국의 광역문화예술교육센터와 유사한 상황으로 광주시 광역센터 역시 광주문화재단의 내부팀으로 조직되어 있음. 또한 외부적으로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사업이 이관되는 Top-Down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함.
- 이는 문화예술교육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조직 구조로 차제에 광역센터의 역할과 위상을 다시 설계하는 작업을 해야 함. 가장 바람직한 것은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독립시키는 것임.
- 문화재단의 특성상 사업집행부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팀 역시 중앙에서 내려주는 사업을 진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 최악의 경우 문화재단 상황에 따라 인력의 감축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업무의 추가 부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

- 문화체육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광역문화예술교육센터의 독립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예산지원 미비로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음.
- 광역문화예술교육센터의 독립은 현재로는 요원해 보이나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당장 독립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문화재단 조직 내에서 광역센터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독립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음.
- 광역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나온 이야기임. 하지만 광역센터의 조직적 한계 뿐 아니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의 관계문제, 예산 지원 한계 등으로 위상과 역할 강화는 구호에 머물고 있음.
- 광역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단기간에 강화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비예산 사업부터 차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음.
- 가장 먼저 광역센터의 허브 역할을 강화하는 것임. 지금까지 광역센터는 지역에 문화예술교육을 공급하기에 바빴음. 이제부터는 지역의 자원을 파악하고 이들간의 연계를 도모하며 자기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문화예술강사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을 써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자체 연구모임을 지원하여 강사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함.
- 지금까지 교육청과 업무협의를만 하는 수준이었다면 협업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해야 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소를 꾸리는 문제, 학교 선생님들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인식 제고 문제,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문화예술교육을 파악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문제까지 교육청과 협의하며 일을 추진해야 함.
- 차후 설립될 기초문화예술교육센터나 생활권역 문화예술교육센터와의 관계에서도 광역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현재 광역센터에서 생성하는 통계는 없음. 매해 중요 항목에 대한 통계는 누적시키면서 향후 시계열 분석도 가능해야 함.

2. 광주시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계획 수립

□ 정부의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이 아닌 광주 문화예술교육 계획 수립

- 문화예술교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에도 나와있듯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통보된 해의 연말까지는 광역자치단체별로 문화예술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함.
- 의무사항과 별도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책 철학을 갖고 추진하려면 그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비전과 목표, 그리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 등이 담겨 있어야 함.
- 지역 문화예술교육 계획에 담겨야 할 내용은 법령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그보다 큰 틀에서 광주시의 문화예술교육 인프라와 환경에 관한 분석, 광주시 문화예술교육 실태에 관한 조사, 광주시 관련 조례 및 제도 분석, 재정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지역 문화예술교육이 법정계획이지만 재정계획을 담는다 하여 예산이 확보되지 않음. 때문에 광주시에서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예술교육 예산을 포괄적 교부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함.
- 현재의 예산은 지역에서 자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추진하기에 경직되어 있고 여유가 없음. 문화자치와 관련하여 포괄적 교부가 논의되고 있듯이 문화예술교육 역시 포괄적 교부를 중앙정부에 요청해야 함.

□ 교육대상과 내용을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문화예술교육의 확산 주도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상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 뿐 아니라 문화재, 문화산업도 교육 대상임.
- 문화재를 비롯한 광주의 문화유산은 시민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제고에 기여를 하며, 특히 문화콘텐츠는 광주의 주력산업으로 많은 시민의 지지를 얻을 필요가 있음.
- 문화콘텐츠는 대중적이기 때문에 교육 내용으로 친근하고 흥미를 유지한 채 교육을 진행하기가 용이함. 현재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 적극적인

로 개발되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문화콘텐츠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들이 지적재산권을 정확히 인식하고 무엇을 소비할 것인지 올바른 판단능력을 갖추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 하는 것은 문화산업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아래와 같은 문화콘텐츠 관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세션	주제	내용	주요관련 교과
[세션1] 문화와 경제	데미안과 해리포터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창작과 생산의 차이 -문화와 경제의 관계	사회 음악/미술 국어
	보로로와 돌리의 차이점	-2D와 3D -글로벌 CGI센터 견학 -CT가 국가경쟁력	기술가정
	게임 한 판의 나비효과	-문화산업과 국가경제 -OSMU -미디어와 콘텐츠	사회
	영화 관람비의 비밀	-제작과 유통의 이해 -콘텐츠 제작과정 소개 -창조와 부가가치 이해	국어 사회
	돈은 언제나 모자르다 (합리적인 소비)	-문화소비의 개념 -소비계획 세우기 -작품 정보 얻기	사회
[세션2] 리터러시	어떤 영화를 어떻게 볼까?	-작품 선별 기준 -극장, IPTV, 모바일	음악/미술 국어 사회
	영화 보고 블로그 작성하기	-감상평 작성하기 -감상 댓글 달기 -친구들과 토의하기	음악/미술 국어
	음악은 읽는거야	-가사를 감상하는 법 -랩의 라임, 시의 각운 -대중가요 장르	국어 음악
	나는 왜 이걸 볼 수 없나요?	-영상물 등급제 -영상물 심의위원회	도덕
[세션3] 문화시민소양	뮤지컬은 너만 보는 게 아니야!	-관람 에티켓 -바람직한 예매 문화	도덕 사회
	나는 팬이다	-건전한 팬문화 -팬클럽 활동 바로하기	도덕 기술가정
	더 많은 연극을 보는 비법	-사랑티켓, 문화바우처 -문화복지에 대한 이해	사회
	내가 찍어 올린 사진이 불법?	-저작권, 초상권 -선풍과 악플 -MP3, 영화파일 결재	도덕

3. 광주시 문화예술교육 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

□ 핵심 기관인 광역센터, 교육청, 평생교육진흥원 등이 참여

-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핵심 기관들이 협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 핵심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뿐 아니라 공공예술과 평생교육, 그리고 공교육 등이 폭넓게 논의될 수 있어야 함.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9조에 명시된 바 지역문화예술교육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여기서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심의할 수 있음. 하지만 현재 광주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문화예술교육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어 실행기구로 보기는 어렵고 의사결정기구에 그치고 있음.
- 실질적인 협력과 그로 인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실행기구가 절실함. 즉,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실무 담당자들이 협의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실무 협의회’를 제안함.
- 또한 현재는 없는 자치구별 ‘문화예술교육 실무협의회’도 구성하여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주체들이 모여 서로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아울러 교육청 중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실무협의회’도 구성하여 학교 일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폐단들을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활동도 벌여 문화예술교육도 곧 교육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함.

□ 자치구별 조례 제정 및 교육청 주관 조례 제정

- 광주시는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원 조례를 최근에 제정하여 문화예술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하지만 지역의 기초 단위인 자치구에서 제정된 조례는 없으며, 문화예술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할 교육청 주관의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음.
- 교육청 조례의 경우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할 뿐 아니라 학교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문화예술교육 실무협의회에 대한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까지 담고 있어야 함.

- 자치구 조례 역시 기초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책무, 자치구 문화예술교육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실질적으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들이 모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함.
- 특히 자치구 조례에서는 현재 광주시에 없는 기초문화예술교육센터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향후 확대될 생활권역 문화예술교육 거점과 연계 및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광주시 문화시설과의 연계 강화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대부분은 민간단체 의존도가 높음. 그에 반해 광주시 민간 운영단체는 자체 학습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기획 및 운영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광주시 문화기반시설과 연계를 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하나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진행률은 낮음.
- 문화기반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재정과 예산의 확보라고 답했음. 하지만 재정과 예산의 현황이 유사한 여타 광역시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문화예술교육 수행률이 현저히 떨어짐.
- 결국 재정과 예산, 전문인력 등이 부족해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 부족이 원인임.
- 또한 지금까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의 복지시설 및 여러 부처에서 운영하는 특수시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강사를 파견하여왔으나 시민 향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기반시설 대상의 사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추진하였음.
- 지역 내의 문화기반시설이라 할 수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문화예술회관과 문화의집 등을 문화예술교육을 전달하는 서비스 매체로 활용이 가능함. 나아가 이들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기관으로 지역의 문화예술분야에도 기여하는 주요 기반시설임.

- 문화기반시설의 또 다른 특징은 이들이 신규고객을 발굴할 경우 그 신규고객은 자동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잠재적 대상자가 된다는 것임. 결국 문화예술교육의 확장을 위한 잠재적 대상자의 발굴은 매우 중요한 사안임.
- 광주시 형편상 문화기반시설이 생활권역이나 기초문화예술교육센터의 역할로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의 거점으로 활용은 가능함. 이들과 연계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확산시킬 필요성이 있음.
- 우선적으로 문화기반시설과 광역센터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협의체를 조직하는 것이 필요

□ 광주시 문화예술교육 총회 제안

- 이상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구들은 사안별 및 목적별로 구성되어 분절적이며 단편적인 협의체일 수 있음.
- 이를 한데 묶어 연1회 광역단위에서 마을단위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총회 개최를 제안함.
- 총회에서는 광주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사항들을 공유하고, 당해연도 사업 중에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역량강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내년도 사업계획을 공유하여 세부 사업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부여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짐.
- 또한 활발한 의사소통도 보장하는 자리여서 문화예술강사간, 문화예술교육단체간, 문화예술교육 지원 담당자들간의 의사소통뿐 아니라 서로 다른 영역과 상급기관에도 건의를 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광주시 문화예술교육 역량이 한데 모이도록 해야 함.
- 현재 광역센터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축제를 확대개편하는 방안도 합리적이라 판단됨.

4. 지역예술교육센터의 체계화 및 활성화

□ 방사형 조직으로 광역센터 - 기초센터 - 생활권 센터의 체계화

- 광역센터는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사업 대행자로서의 자격이 강했고, 지역의 입장에서 문화예술교육 공급자의 역할이 강했음. 하지만 이제 역할을 전환하여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자원을 발굴하고 육성하며, 이들 의 연결을 통해 서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문화예술교육 허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
- 아울러 이번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이는 기초센터 역시 해당 권역 내에서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 공급과 문화예술교육자원의 발굴을 해야 함. 정부차원의 기초센터 지원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현재 광주시 여건상 인적 자원이 충분치 않음.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인적 역량 강화를 긴 호흡으로 추진하며 기초문화예술교육센터의 단계적 설치를 제안함.
- 종합계획에서 두드러진 점은 기초센터 외에 생활권역 문화예술교육 거점을 마련한다는 것임.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시민의 일상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접점을 마련한다는 것으로 광주시에게도 중요한 사업이 될 것임. 이러한 생활권역은 유동인구와 거주자에 따른 데이터를 기반으로 후보지를 선정하고 예산과 인력에 따라 시범사업을 통해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함.
- 이렇게 될 경우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시설이 광역센터-기초센터-생활권역 센터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들의 관계가 하향적 체계가 아닌 수평적 또는 방사형 체계라는 점임.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그물망으로 엮여졌을 때 이들 스스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서로의 발전을 독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음.
- 지역 내 거점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별다른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보다 현재로서는 이들 간의 그물망을 좀 더 촘촘히하여 정보가 원활히 교류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우선임.

□ 광역센터의 역할과 임무 확장

- 광역센터는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을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해야 함. 이를 테면 광주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기획, 문화예술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아카이빙 시스템 구축, 문화예술교육 관련 각종 통계 및 자료 조사, 광주시 시민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 문화예술교육 인적 역량 강화, 기초센터 지원, 광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협의회 총괄 등이 있음.
- 모든 정책의 기본은 관련 통계 조사 및 수요조사임. 지금까지 광주시에서 이를 시행한 적이 없으며, 문화예술교육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모두 용이한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플랫폼도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음. 이 플랫폼에는 문화예술교육 강사풀,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타시도 우수사례 등이 포함되어 지역 내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현재 광주문화재단 내에 문화예술교육팀으로 편제된 광역센터를 독립 법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광주문화예술교육의 모든 것을 포괄하며 총괄하는 법인으로 출범하여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 기초센터와 생활권역 센터의 역할 관계

- 기초센터는 최종적으로 5개구에 1개씩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다만, 생활권역 센터 역시 자치구별로 수 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마을만들기 센터나 교육청의 마을교육센터와 협력하여 생활권역 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음.
- 생활권역 센터에는 문화예술교육 인턴이나 신진 강사를 배치하여 이들이 위치한 생활권역 내의 자원을 스스로 조사하고 연구하여 생활권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이 역시 문화일자리 사업과 연계할 수 있으며, 때문에 최소 3년간은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함.
- 생활권역 센터에서 기초센터와 협의하여 정기 강좌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개최 하기도 하지만 시민의 일상에서 문화예술체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

기 때문에 상주 인력으로서 인턴이나 신진 강사를 배치하는 것임.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예술가를 위한 레지던스 사업과 겹하여 진행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음.

□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

- 모든 사업의 활성화는 결국 인적 자원의 역량에서 출발함. 하지만 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수년 전부터 갈등으로 점철되어 왔음. 이 정책의 출발점이 잘못되었든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욕심이 과하게 들어갔든 현재 문화예술강사의 인식은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창출로 인식하고 있음. 때문에 고용보장이 어려우면 4대보험이라도 해결해 달라는 입장임.
- 문화예술강사지원사업의 첨예한 갈등대립으로 현재 광주 광역센터에서 문화예술강사지원사업을 거부하고 민간에 위탁해서 진행하는 상황임. 이것이 중앙정부와 문화예술강사 간의 문제일 수 있으나 결국 지역 내의 인적 자원이고 지역 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해 모르쇠로 일관할 수 없는 문제임.
- 광주형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자동차 분야에 지역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상대적으로 이들의 소외감을 더 강화시키고 있음.
- 당초 중앙정부 예산에 100% 의존하는 사업이라 운신의 폭이 크지 않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광주형 문화예술강사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 광주시 차원의 독립적 예산 확보가 필요함. 중앙정부에 의존해서는 해법을 찾을 수 없음. 그렇다고 광주시 역시 예산이 넉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광주시 교육청도 참여해야 하며,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을 해야함.
- 국가적으로 보면 문화예술강사만이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며, 교육계로 좁히면 기간제 교사와 방과후 교사 문제와도 연결되는 것임. 그렇다고 해서 방치만 할 수도 없음.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광주형 일 자리를 만들어내고 추진하듯이 광주형 문화예술강사도 만들어내고 추진해야 함.

5.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 대시민 홍보 강화: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과 효과 중심

- 문화예술교육이 10년 넘게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도 시민 중 문화예술교육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시민이 많음.
- 공급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데 집중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교육 실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시민 홍보를 해야함.
- 단순히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알리는 것 뿐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이 왜 필요하고 광주시는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는지, 문화예술교육을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 시민의 눈높이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홍보해야 함.
- 지역방송과 연계하여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정보 프로그램이나 예능 프로그램에 문화예술교육의 현장을 직접 보여주고 참여하는 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시민에게 전달해야 함. 일반적인 정책 홍보와 달리 세밀하고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학교 현장 홍보 강화

-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방과후학교나 단순 기능 전수 정도로 여겨 문화예술교육의 목표를 잘못알고 있는 경우가 많음.
- 교육현장의 보수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인식 전환은 더더욱 어려움. 장기적으로 차근차근히 풀어야 하는 문제임.
- 앞서 언급했던 교육청 주관의 조례 제정이 시급함. 조례 제정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이 엄연한 학교 교육의 한 축이자 목표임을 인식하도록 유도해야 함. 학교장의 책무와 학교의 책무를 정하여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함.
- 학교 현장에서 무리하게 문화예술강사에게 요구하는 것이 결국 문화예술에도 좋지 않고 학교 학생에게도 좋지 않다는 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계도에 나서야 함.

VII

결론

VII. 결 론

□ 현장의 실태를 온전히 파악하기는 어려웠던 점은 한계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에 있어 기존의 문헌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였기 때문에 현장의 실태를 온전히 파악하기는 어려웠음.
- 물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몇몇 현장 전문가와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나 이 역시 한계는 명확함.
- 차후에 광역센터에서 지역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통계를 축적하고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면 현장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용이할 뿐 아니라 시계역 분석도 가능하여 입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음.

□ 문화예술교육의 총체적인 접근이 이뤄지지 못한 점은 한계

- 문화예술교육은 민간영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평생교육진흥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문학 강좌 등도 문화예술교육임. 또한 광역센터의 업무영역에서 벗어난 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은 학교에서 가장 빈번히 행해지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이며, 정규교과를 비롯하여 방과후학교와 창의체험활동 등 기존 제도권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문화예술교육도 엄연히 존재함.
- 본 연구에서 이러한 점들을 모두 다루지 못하고 현재 광역센터에서 행해지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에 국한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임.

□ 분야별 세부적인 연구 필요

- 후속연구로써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나누어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함.
- 학교문화예술교육은 꿈다락 학교와 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 등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상당수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이며, 사회문화예술교육은 평생교육의 관점과 생활문화의 관점에서 성인 이후에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분야임.

- 각각의 범위와 역할, 그리고 목적이 다른 만큼 분야별로 분리하여 세밀하고 섬세한 연구를 진행해야 함.
- 이러한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비전과 전략, 그리고 추진과제가 탄탄하게 구성될 수 있으며 현장과의 괴리감을 줄일 수 있음.

□ 문화권리적 관점에서 특수계층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 필요

-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복지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 문화권리적 관점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재검토 필요
-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문화예술에 대한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임. 다만 문화예술에 대한 경제적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미미한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문화 프로그램이 취약계층에게 보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없음.
- 문화예술교육도 마찬가지임. 문화권리적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은 보편적 교육권에 해당하며 이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함. 하지만 문화예술교육이 활발하지 않은 시점에서 취약계층에만 무료로 보급하는 프로그램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음.
- 적정 문화예술교육이 어느 정도이고, 문화권리적 관점에서 어느 정도가 공급되어야 하며 어느 선에서 민간의 영역으로 넘어가는지에 대한 연구가 기존에 없었음.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책적 치밀함을 제고해야 함.



참 고 문 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8),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및 정책방향 연구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7), 지역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연구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6), 2015지역문화예술교육 평가 연구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6), 지역문화예술교육자원 실태조사 및 활용을 위한 분류체계 연구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2014 소년원학교 대상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사회문화예술교육 중장기사업전략 연구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학교문화예술교육 중장기사업전략 연구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3), 문화예술교육 정책 발전전략 연구
- 김석범(2016), 학교문화예술교육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토론회 (2016.12.07.)
- 김수정, 최셋별(2017), 문화예술교육은 왜 혼란스러운가?, 문화와 사회, 제24권, 7-54.
- 김은영(2013), 이론과 현장이 살아있는 문화예술교육, 학이시습.
- 김중휘(2017),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혁신과제(새정부 문화정책방향 토론회)
- 박민하, 이병민(2016), 문화예술교육 일상화의 개념적 확장과 적용, 인문콘텐츠, 제41호, 285-305.
- 박신자(2010),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한 통합형 문화예술교육의 발전 방향, 디지털디자인학연구, 제10권 4호, 199-208.
- 박영정(2015), 초중등학교 예술·체육교육 현황 및 개선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백령(2008), 2007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정착화 방안, 문화정책논총, 제20집, 193-217.
- 백선희(2017), 서울시민의 문화적 권리 보장 차원에서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4대 개선방안 수립, 서울연구원
- 서울문화재단(2015), 학교예술강사와 예술노동-문화예술교육의 질적인 성장을 위한 과제.
- 신승환(2008), 문화예술교육의 철학적 지평, 한길아트.
- 양혜원(2015), 사회문화예술교육 중장기 사업전략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용호성(2007), 문화예술교육정책에서 효과적인 거버넌스 모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논문.
- 이동연(2012), 문화예술교육정책의 현황과 혁신방안, 문화예술교육정책 평가와 대안모색 포럼, 1-23.
- 이병준(2008),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비판적 재구성과 미래전망, 문화정책논총, 제19호, 11-40.
- 이병준(2005), 문화예술교육 기획전문인력의 직업적 전문성 연구, 예술경영연구, 제8집, 21-48.

이선구(2015), 예술강사 지원상버 선발/배치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호영, 서우석(2011),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문화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책논총, 25권 1호, 91-118.

이흥수(1996), 교육개혁과 예술 교육의 방향, 21세기 예술 교육의 역할과 진로 제4회 학술세미나, 한국교원대학교 예술교육연구소.

조현성(2016), 문화예술교육정책 중장기 추진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장현선, 윤혜란 (2014), 2014 학교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최보연(2017),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분석 및 개선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과제 2018-25

광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A study for the Vitalization
of the Art and Culture Education in Gwangju

■ 인쇄일: 2018년 12월

■ 발행일: 2018년 12월

■ 발행인: 박 성 수

■ 발행처: 광주전남연구원 <http://www.gjeri.kr>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56 토담리치타워 7, 8층(빛가람동)

TEL 061)931-9300 FAX 061)931-9393

■ 인쇄처: 광신출판기획

■ ISBN: 979-11-89645-44-1 93300

-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제나 복사는 금합니다.

